

남북대화

제 76 호

(2013.2. ~ 2013.12.)



통일부

목차

Contents

제1장 개관	7
--------	---

제2장 남북 정치 분야 회담	15
-----------------	----

1. 남북당국회담 실무접촉	15
2. 남북당국회담의 무산	20

제3장 남북 경제 분야 회담	25
-----------------	----

1. 개성공단 남북당국실무회담	25
가. 제1차 개성공단 남북당국실무회담	25
나. 제2차 개성공단 남북당국실무회담	29
다. 제3차 개성공단 남북당국실무회담	30
라. 제4차 개성공단 남북당국실무회담	32
마. 제5차 개성공단 남북당국실무회담	34
바. 제6차 개성공단 남북당국실무회담	36
사. 제7차 개성공단 남북당국실무회담	38

2.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회의	40
가. 제1차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40
나. 제2차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44
다. 제3차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46
라. 제4차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48
3.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 회의	50
가. 통행·통신·통관 분과위원회	50
나. 출입·체류 분과위원회	52
다. 투자보호 및 관리운영 분과위원회	54
라. 국제경쟁력 분과위원회	55

제4장 남북 인도 분야 회담 59

1. 남북적십자실무접촉	59
--------------	----

부록 65

1. 남북관계 주요 일지	65
2. 남북회담 합의서	93

제1장

개관



2013년 2월 25일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입각하여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모색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행복한 통일 시대의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서로 대화하고 약속을 지킬 때 신뢰는 쌓일 수 있음을 역설하였다.

이러한 기조에 따라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남북 간 대화를 통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13년 남북회담은 정치 분야 1회, 경제 분야 22회, 인도 분야 1회 등 총 24회 개최되었고,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 등 8개의 남북합의서를 채택하였으며,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와 산하 분과위원회 및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사무처 설치 등 남북당국 간 상설 대화채널을 구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는 남북회담이 진행되기에는 어려운 환경이었다. 북한은 2012년 말부터 장거리 미사일 발사(2012.12.12), 3차 핵실험 강행(2013.2.12.) 등 한반도의 긴장을 지속적으로 고조시켜 나갔다. 특히, 판문점 남북직통전화(3.11.)와 군 통신선(3.27.)을 일방적으로 차단하고, 개성공단의 북측 종업원을 철수시켜 개성공단을 잠정 중단시켰다(4.8.). 이에 따라 개성공단 남측 인원이 전원 귀환하였고(5.3), 남북 간 연락채널이 모두 차단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당국 간 대화를 통해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통일부 장관 성명을 발표하였고(4.11.), 이어 통일부 대변인 성명(4.25., 5.14.)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당국 간 회담을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은 정부의 대화 제의는 거부하면서 우리측 기업에게는 방북을 허용한다는 의사를 표명(5.28.)하는 등 우리 내부의 갈등을 유도하기 위한 구태를 재현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책임 있는 당국 간 대화가 필요하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결국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였다. 북한은 6월 6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특별담화문」을 통해 6·15 계기 개성공단 정상화와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위한 남북당국 사이의 회담을 제의한다고 하면서 우리측의 남북당국 간 대화 제의에 호응해 왔다.

남과 북은 「남북당국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접촉을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6월 9일부터 6월 10일까지 진행하여, 남북 간 현안을 포괄적으로 협의하기 위한 「남북당국회담」을 6월 12일부터 6월 13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하는 데 합의하게 되었다. 그러나 북한측은 「남북당국회담」을 하루 앞두고 대표단 명단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우리측 수석대표인 통일부 차관의 격을 문제 삼아 「남북당국회담」을 무산시켜 버리고 말았다.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지 석 달이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장마철이 시작되면서 더 큰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7월 4일 남북당국 간 실무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고, 북한측이 이에 호응해 옴에 따라 「개성공단 남북당국실무회담」이 7월 6일부터 7월 7까지 이틀간 판문점 ‘통일각’에서 개최되었다. 남과 북은 개성공단 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개성공단을 발전적으로 정상화해 나간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밤샘 회담을 통해 「개성공단 남북당국 실무회담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장마철 피해를 줄이기 위해 7월 10일부터 기

업인들이 개성공단을 방문하여 설비를 점검하기로 하였고, 준비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 기업들이 재가동하도록 하며, 가동 중단 재발 방지 등 개성공단을 정상화하기 위해 후속 회담을 개최하기로 하는 등 4개 항에 합의하였다.

이후 남과 북은 개성공단 가동 중단 재발 방지와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개성공단의 국제화, 공단 재가동 문제 등에 대해 여섯 차례 회담을 추가로 개최하여 제7차 회담(8.14.)에서 5개 항의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이 합의를 통해 북한의 일방적 조치에 의한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의 재발을 예방할 수 있게 되었고, 개성공단이 국제적 공단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이 합의에 따라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가 구성(9.2.)되었고, 산하에 「국제경쟁력 분과위원회」, 「투자보장 및 관리운영 분과위원회」, 「출입·체류 분과위원회」, 「통행·통신·통관 분과위원회」 등 4개의 분과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가 개성공단 현지에 설치(9.30.)되었다. 이처럼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체제가 가동됨으로써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선 문제를 지속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상설 대화채널이 구축되었다. 이를 토대로 남과 북은 2013년에 남북공동위원회 4회, 분과위원회 11회(국제경쟁력 분과 2회, 투자보장 및 관리운영 분과 2회, 출입·체류 분과 4회, 통행·통신·통관 분과 3회)를 개최하여 제도와 운영 개선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정부는 또한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대통령은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북한에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하였고, 다음 날 정부는 북한에 이를 위한 「남북적십자실무접촉」을 제의하였다. 북한은 이를 수용하면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 회담도 함께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다. 정부는 이산가족 문제는 순수한 인도적 문제로서 금강산 관광 사업과 연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에

서 적십자 실무접촉을 우선 추진하였고, 이에 따라 남과 북은 8월 23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적십자실무접촉」을 개최하여 9월 25일부터 30일까지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 행사 개최와 10월 화상 상봉 개최 등에 합의하였다.

한편, 정부는 「금강산관광실무회담」에 대해서는 10월 2일에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 행사 나흘 전인 9월 21일 일방적으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와 「금강산관광실무회담」 연기를 발표하였다. 정부는 이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조속히 응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북한이 불응함에 따라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끝내 이루어지지 못하고 말았다.

〈남북회담 개최 현황(2013.2.~2013.12.)〉

분 야	회 담 명	일 자	장 소
정치 분야 (1)	남북당국회담 실무접촉	6.9.~10.	판문점(평화의 집)
경제 분야 (22)	제1차 개성공단 남북당국실무회담	7.6.~7.7.	판문점(통일각)
	제2차 개성공단 남북당국실무회담	7.10.	개성공단(종합지원센터)
	제3차 개성공단 남북당국실무회담	7.15.	개성공단(종합지원센터)
	제4차 개성공단 남북당국실무회담	7.17.	개성공단(종합지원센터)
	제5차 개성공단 남북당국실무회담	7.22.	개성공단(종합지원센터)
	제6차 개성공단 남북당국실무회담	7.25.	개성공단(종합지원센터)
	제7차 개성공단 남북당국실무회담	8.14.	개성공단(종합지원센터)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	9.2.	개성공단(종합지원센터)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투자보장 및 관리운영 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9.4.	개성공단(종합지원센터)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국제경쟁력 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9.4.	개성공단(종합지원센터)

분 야	회 담 명	일 자	장 소
경제 분야 (22)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출입·체류 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9.5.	개성공단(종합지원센터)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통행·통신· 통관 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9.5.	개성공단(종합지원센터)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제2차 회의	9.10.~11.	개성공단(종합지원센터)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출입·체류 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	9.13.	개성공단(종합지원센터)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통행·통신· 통관 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	9.13.	개성공단(종합지원센터)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제3차 회의	9.16.	개성공단(종합지원센터)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출입·체류 분과위원회 제3차 회의	9.26.	개성공단(종합지원센터)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투자보장 및 관리운영 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	11.13.	개성공단(종합지원센터)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국제경쟁력 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	11.13.	개성공단(종합지원센터)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출입·체류 분과위원회 제4차 회의	11.14.	개성공단(종합지원센터)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통행·통신· 통관 분과위원회 제3차 회의	11.29.	개성공단(종합지원센터)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제4차 회의	12.19.	개성공단(종합지원센터)
인도 분야 (1)	남북적십자실무접촉	8.23.	판문점(평화의 집)

제2장

남북 정치 분야 회담



1. 남북당국회담 실무접촉(2013.6.9.~6.10.)

가. 개요

박근혜 정부 출범을 전후하여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2012.12.12.),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무효 선언(조평통 성명, 2013.1.23.), 제3차 핵실험(2.12.),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군 최고사령부 성명, 3.5.), 남북불가침 합의 파기 발표(조평통 성명, 3.8.)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켜왔다. 3월 말부터는 개성공단마저 폐쇄하겠다고 위협해 오던 북한은 4월 8일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김양건)의 담화를 통해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를 철수시키며 개성공업지구 사업을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정부는 4월 11일 통일부 장관 성명을 통해, 개성공단 정상화는 대화를 통해 해결되어야 하며, 개성공단과 관련하여 북한이 제기하는 사안들을 논의하기 위해서라도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촉구하였다. 이후에도 정부는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당국 간 회담에 북한이 호응해 나올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였다.(4.25., 5.14.)

이에 북한은 6월 6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특별담화문」을 통해 개성공단 정상화·금강산 관광 재개 등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당국 간 회담을 제의해왔다. 정부는 6월 6일 북한의 호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

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 문제 등 남북 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남북장관급회담」을 6월 12일 서울에서 개최하자고 제의하였다. 이에 북한은 6월 7일 「남북당국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을 6월 9일 개성에서 개최하자고 제의하였다. 같은 날 우리측은 실무접촉 개최에 동의하면서 장소를 판문점 ‘평화의 집’으로 수정 제의하였고, 북한이 이를 수용하여 6월 9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당국회담 실무접촉」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쌍방은 「남북당국회담」 관련 대표, 명칭, 의제 등 행정적·실무적 문제에 대해 협의하였으나, 수석대표의 격과 의제에 대하여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각자의 입장을 반영한 발표문을 각기 채택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천해성(통일부 통일정책실장)	김성혜(조평통 서기국 부장)
대 표	권영양(통일부 과장) 강종우(통일부 과장)	황충성(민족경제협력위원회 참사) 김명철(미상)

나. 진행 경과

(1) 제1차 전체회의

남과 북은 6월 9일 판문점에서 「남북당국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접촉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

회담 명칭과 관련하여 우리측은 당초 「남북장관급회담」으로 제의하였으나, 북한측은 새롭게 시작한다는 차원에서 「남북당국회담」으로 할 것을 제의하였다.

수석대표의 급과 관련하여 우리측은 남북 간 현안을 큰 틀에서 논의하기 위해 책임 있는 당국자 간 협의가 이루어져야 함을 설명하였고, 북한측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이 남북당국 관계를 전담하는 기관이며 ‘상(相)’급이 나갈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대표의 수는 우리측이 수석대표를 포함하여 3명으로 할 것을 제의하였으며, 북한측은 5명으로 하자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회담의 일정 및 장소와 관련하여 우리측은 오·만찬, 참관 같은 형식적인 것을 생략하고 6월 12일부터 13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서울에서 개최하고자 제의하였다.

회담 의제와 관련해서 우리측은 고위급 회담인 만큼 회담 의제를 일일이 열거하기보다는 6월 6일 정부 입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개성공단 정상화, 금강산 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간 현안’으로 포괄적 제의를 하였으나, 북한측은 ‘개성공업지구 정상화, 금강산 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주의 문제, 6·15 공동선언과 7·4 공동성명 발표일 공동 기념, 민간단체들의 왕래와 접촉, 협력 사업 추진, 그 밖의 현안들’을 의제로 할 것을 고집하며, 6월 6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특별담화에서 제기한 모든 사안들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우리측 기초발언 요지〉

- 우리측이 장관급 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의한 것은
 - 남북 간 현안을 큰 틀에서 논의하기 위해서는 실제 권한을 가진 책임 있는 고위 당국자가 만나서 협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 이에 따라 우리측에서는 이번 장관급 회담에 통일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고, 대표는 실·국장급 2명이 나갈 것임.
 - 6년 만에 열리는 고위급 당국 회담인 만큼, 귀측도 당연히 우리측 통일부 장관에 상응하는 고위 당국자가 대표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함.
- 장관급 회담은 서울에서 6.12.~13. 이틀간 개최할 것을 제의함.

〈북한측 기본발언 요지〉

- 회담 명칭은 「북남당국회담」 또는 「북남상급회담」, 남측은 「장관급회담」으로 하면 될 것임.
 - 회담 차수는 쌍방이 각기 편한 대로 하되, 북측은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앞으로 차수를 붙이는 경우 새롭게 붙이면 됨.
- 회담 의제는 개성공업지구 정상화 문제,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흩어진 가족·친척 상봉을 비롯한 인도주의 문제, 6·15 공동선언과 7·4 공동성명 발표일을 공동 기념하는 문제, 민간단체 래왕·접촉, 협력 사업 추진 문제, 그 밖에 북남관계 현안들로 할 수 있을 것임.
 - 이 중 개성공업지구 정상화,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는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6·15 관련 민족 공동행사가 개최되도록 조건을 최대한 보장해 주어야 할 것임.
- 장소 및 날짜는 서울에서 6.12.부터, 대표단 규모는 대표 5명, 수원 3명으로 함.

(2) 수석대표 접촉 및 제2차 전체회의

남과 북은 6월 9일 제1차 전체회의 후 6월 10일까지 수석대표 접촉 8회, 전체회의 1회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여 회담 기간과 장소, 회담 명칭, 왕래 경로 등의 문제에 대해 합의하였다.

회담은 6월 12일부터 13일까지 1박 2일간 서울에서 개최하며, 북측 대표단의 왕래 경로는 경의선 육로로 하기로 하였다.

회담 명칭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남북관계를 정립한다는 차원에서 「남북당국회담」으로 하기로 하였고, 대표단의 규모는 5명으로 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남과 북은 수석대표의 급과 회담 의제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수석대표 급과 관련하여 우리측은 남북 간의 현안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측의 통일부 장관과 북한측의 통일전선부 부장 간에 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으나, 북한측은 상급(장관급) 당국자가 수석대표로 나갈 것이라는 주장을 고수하였다. 회담 의제에 대해서도 양측이 기존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결국 남과 북은 각자의 입장을 담은 발표문을 각기 발표하기로 하고 회담을 종결하였다.

〈우리측 기초발언 요지〉

1. 남북당국 사이의 회담을 6.12.~13.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함.
2. 회담 명칭은 「남북당국회담」으로 함.
3. 회담에서는 개성공단 정상화 문제,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인도주의 문제 등 당면하게 긴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를 협의하기로 함.
4. 회담 대표단은 각기 5명의 대표로 구성하고, 남측 수석대표는 남북문제를 책임지고 협의-해결할 수 있는 당국자로 함.
5. 북측 대표단의 왕래 경로는 경의선 육로로 함.
6. 추가적인 실무적 문제는 판문점 연락관을 통해 협의하기로 함.

〈북한측 기본발언 요지〉

1. 북남당국 사이의 회담을 6.12.~13.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함.
2. 회담 명칭은 「북남당국회담」으로 함.
3. 회담에서는 개성공업지구 정상화 문제,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흩어진 가족·친척 상봉을 비롯한 인도주의 문제, 6·15 및 7·4 발표일 공동 기념 문제, 민간 래왕과 접촉, 협력 사업 추진 문제 등 북남관계에서 당면하고도 긴급한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함.
4. 회담 대표단은 각기 5명의 대표로 구성하되, 북측 단장은 상급 당국자로 함.
5. 북측 대표단의 래왕 경로는 서해선 육로로 함.
6. 추가적인 실무적 문제는 판문점 연락 통로를 통해 협의함.

2. 남북당국회담의 무산

6월 9일부터 6월 10일까지의 「남북당국회담 실무접촉」 이후 우리측은 북한측에 관례대로 단장 명단을 통보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북한측은 대표단 명단을 동시에 교환하자고 고집하였다. 우리측은 「남북당국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동시 교환을 수용하고 6월 11일 오후 1시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대표단 명단을 교환하였다. 우리측은 김남식 통일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당국자 5명으로 구성하는 내용이었으며, 북한측은 강지영 조평통 서기국 국장(북측은 상급이라 주장)을 단장으로 5명의 대표로 구성한다는 것이었다.

명단 교환 직후 북한측은 우리측 수석대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우리측에서 장관급이 나오지 않으면 「남북당국회담」이 열릴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해 왔다.

남북 간 실질적 현안 해결과 남북관계의 새로운 정립을 위해, 우리측은

권한과 책임 있는 고위 당국자가 만나서 현안을 논의하고자 장관급 회담을 제의하였다. 우리측은 이미 실무접촉에서 권한과 책임 있는 당국자로서 우리의 통일부 장관에 상응하는 수석대표가 나와야 함을 분명하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비정상적인 관행에 따라 권한과 책임을 인정하기 어려운 인사를 장관급이라고 통보해 왔으며, 오히려 우리측에 부당한 주장을 철회하는 조건에서만 회담에 나올 것이라고 하였다.

우리측은 「남북당국회담 실무접촉」 후 각기 발표한 대로 우리측은 ‘남북문제를 책임지고 협의·해결할 수 있는 당국자’인 통일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하고, 북한측은 자신들이 발표한 ‘상급 당국자’를 단장으로 해서 서울에서 「남북당국회담」을 개최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우리 입장에 대해 북한측은 우리측이 수석대표를 차관급으로 교체한 것은 ‘「남북당국회담」에 대한 우롱이고 실무접촉 합의에 대한 왜곡으로서 엄중한 도발로 간주하고 대표단 파견을 보류한다’고 하면서 회담 무산을 일방적으로 통보해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남북당국회담」 관련 정부 입장’(6.11.)을 통해 북한측의 일방적인 회담 무산 통보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남북문제를 책임지고 협의·해결할 수 있는 우리측 당국자인 통일부 차관의 격을 문제 삼아 대화까지 거부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남북당국회담」에 호응해 올 것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끝내 호응해 오지 않아 결국 「남북당국회담」은 무산되고 말았다.

제3장

남북 경제 분야 회담



1. 개성공단 남북당국실무회담

가. 제1차 개성공단 남북당국실무회담(2013.7.6.~7.7.)

(1) 개요

2013년 3월 27일 북한은 한미 합동 군사훈련과 독수리 연습을 이유로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일방적으로 차단하였다. 이어 4월 8일에는 개성공단 내 북한 근로자의 전원 철수와 공단 가동 잠정 중단을 발표함에 따라 개성공단이 가동 10년 만에 중단되었다.

우리 정부는 4월 11일과 25일, 5월 14일 등 세 차례에 걸쳐 개성공단 정상화와 원·부자재 및 완제품 반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당국 간 실무회담 개최를 북한에 제의하였으나, 북한의 거부로 성사되지 못하였다.

6월 9일부터 10일까지 판문점에서 개최된 「남북당국회담 실무접촉」에서 남북은 개성공단 정상화 문제를 「남북당국회담」 의제로 합의하였으나, 북한이 우리측 수석대표의 급을 이유로 회담을 무산시킴에 따라 개성공단 정상화 논의도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7월 3일 북한은 장마철 설비·자재 피해 대책 수립을 위한 개성공단 관계자들의 방북을 허용하고 필요한 협의를 하자는 내용의 통지문을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와 개성공단 입주기업협회에 전달하였다.

이에 정부는 7월 4일 남북당국 간 실무회담을 가질 것을 북한에 제의하였고, 북한이 동의해 오에 따라 「제1차 개성공단 남북당국실무회담」이 7월 6일부터 7일까지 판문점 '통일각'에서 개최되었다.

〈쌍방 대표단 명단(제1~2차)〉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서 호(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	박철수(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
대 표	홍진석(통일부 과장) 허진봉(통일부 과장)	허영호(평양법률사무소장) 원용희(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장)

(2) 진행 경과

우리측은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문제와 공단 가동 중단에 따른 기업들의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협의를 진행하였다.

우리측은 북한의 일방적 조치로 인한 개성공단 가동 중단은 남북당국 간 합의는 물론 북한의 법규에도 위배되는 행위이며, 남북 간 신뢰를 훼손하는 조치임을 분명하게 지적하였다.

또한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가동 중단으로 발생한 기업 피해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과 함께 재발 방지 보장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개성공단의 정상화는 단순한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발전적 정상화'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설명하였다.

한편 우리측은 장마철을 맞아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완제품과 원·부자재, 설비의 반출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를 위해 북한측에 반출 및 신변안전 보장과 군 통신선의 조속한 복구를 요구하였다.

북한측은 개성공단 재가동에 역점을 두면서 가동할 수 있는 공장부터

우선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우리측 제안 사항과 관련하여 완제품 반출에는 동의하였으나, 원·부자재와 설비 반출에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쌍방은 전체회의 2회와 수석대표 접촉 10회 등 총 12차례의 접촉을 통해 개성공단 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개성공단을 발전적으로 정상화해 나간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개성공단 남북당국실무회담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남북은 시설 점검을 위한 기업인들의 방북, 원·부자재와 설비 반출, 신변 안전 보장, 후속 회담 일정 등에 합의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우리측 기초발언 요지〉

- 개성공단은 남북 경제협력의 장으로 엄중한 정세 하에서도 유지되어 왔으나, 북한측의 일방적 조치로 인해 중단되었음.
-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인해 우리 기업이 입은 재정적 손실과 신용 추락 등 막대한 피해에 대해 북한측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과 분명한 재발 방지 보장이 있어야 함.
- 개성공단을 국제적 수준의 경쟁력 있는 공단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일방적 통행 차단과 가동 중단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장 장치 마련이 필요함.
- 더불어 신변안전 보장과 투자자산 보호를 위한 남북 합의서의 수정·보완과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위한 통행·통신·통관 제도의 정비도 필요함.
- 당면하여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완제품 및 원·부자재의 조속한 반출과 인원들의 방북 및 시설 점검이 있음.

〈북한측 기본발언 요지〉

- 장마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기업들의 설비 및 건물 점검과 관련한 실무적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협의하고 빨리 실현시킬 것을 제기함.
- 제품 및 원·부자재 반출과 관련하여 우선 생산된 제품부터 반출하되, 원·부자재는 재가동을 염두에 둔다면 불필요하게 반출하는 일은 고려하여야 할 것임.
- 공업지구 정상화와 관련하여서는 빨리 원상복구를 끝내고 가동할 수 있는 공장부터 운영하자는 입장임.

〈합의서 요지〉

남과 북은 개성공단 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개성공단을 발전적으로 정상화해 나간다는 데 인식을 공유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

1. 장마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남측 기업 관계자들을 비롯한 해당 인원들이 7월 10일부터 개성공단을 방문하여 설비 점검 및 정비를 진행
2. 남측 기업들이 완제품 및 원·부자재를 반출할 수 있도록 하며 관련 절차에 따라 설비를 반출
3. 설비 점검과 물자 반출 등을 위해 개성공단에 출입하는 남측 인원들과 차량들의 통행·통신과 남측 인원들의 안전한 복귀 및 신변안전을 보장
4. 준비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 기업들이 재가동하도록 하며, 가동 중단 재발 방지 등 개성공단을 정상화하기 위해 7월 10일 개성공단에서 후속 회담을 개최

나. 제2차 개성공단 남북당국실무회담(2013.7.10.)

(1) 개요

제1차 실무회담의 합의에 따라 2013년 7월 10일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제2차 개성공단 남북당국실무회담」이 개최되었다.

제1차 실무회담 결과, 설비 점검과 물자 반출 등 기업들의 당면 현안이 해결됨에 따라 제2차 회담부터는 가동 중단 재발 방지 등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2) 진행 경과

우리측은 자유로운 경영활동 보장과 국제규범에 맞는 제도 개선 등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구상을 설명하면서, 개성공단을 국제적인 수준의 공단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일방적 조치로 인해 공단이 문을 닫는 일이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우리측 기초발언 요지〉

-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에 대한 우리측 구상 제시
 - ① 신변안전 보장과 투자자산 보호가 이루어지는 안전한 공단
 - ② 통행·통신·통관 제도의 정비를 통해 자유로운 기업 활동 보장
 - ③ 노무·세무·보험 등 기업 경영과 생산 활동에 있어서 국제적 기준 통용
 - ④ 외국 자본의 유치를 통한 공단의 국제화

개성공단 가동 재개와 관련하여서는 일방적인 가동 중단에 대한 북한측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 재발 방지에 대한 분명한 약속과 함께 가시적인 조치가 있을 때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측은 가동 중단 책임의 부담을 우리측에 전가하면서, 시설 장비 점검과 정비 작업을 조기에 끝내고 공단 재가동에 들어갈 것을 주장하였다. 북한측은 재발 방지나 발전적 정상화에 대한 구체적 입장 없이 재가동을 위한 실무 대책 수립에 중점을 둔 합의서안을 제시하였다.

〈북한측 기본발언 요지〉

- 개성공업지구를 우리민족끼리의 이념이 구현되는 북남 사이의 경제협력 사업으로 일관되게 하여야 할 것임.
- 북과 남은 개성공업지구 정상 가동에 저촉되는 일을 일체 하지 말아야 할 것임.
- 기업들의 설비 정비가 끝나는 대로 재가동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쌍방은 가동 중단 책임 소재 등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제기된 문제들을 후속 회담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다. 제3차 개성공단 남북당국실무회담(2013.7.15.)

(1) 개요

남북은 개성공단 가동 중단 재발 방지와 이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개성공단의 국제화, 공단 재가동 문제 등의 의제를 둘러싸고 합의점을 찾기 위해 실무회담을 이어갔다.

제2차 실무회담에서 쌍방이 제기했던 문제들을 중심으로 7월 15일 제3차 실무회담을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하였다.

〈쌍방 대표단 명단(제3차~7차)〉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김기웅(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	박철수(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
대 표	홍진석(통일부 과장) 허진봉(통일부 과장)	원용희(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장) 황충성(민족경제협력위원회 참사)

(2) 진행 경과

우리측은 가동 중단 재발 방지 보장 문제와 신변안전과 투자자산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문제, 국제적 수준의 기업 활동을 보장하는 방안 등에 대한 입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합의서안을 북한측에 제시하였다.

〈우리측 기초발언 요지〉

- 개성공단을 단순히 재개하는 것만으로는 개성공단을 국제적 수준의 공단으로 발전시킬 수 없음.
- 앞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공단의 정상적 가동을 저해하는 일방적 조치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대내외에 확실하게 보장해야 함.
- 개성공단을 왕래하는 우리측 인원들의 신변안전과 기업들의 투자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들을 완비해야 함.
- 개성공단에 입주하는 남측 기업과 외국 기업들에 대해 국제적 수준의 기업 활동을 보장해야 함.

북한측은 개성공단의 조속한 재가동을 주장하고, 가동 중단의 근본 원인 등에 대한 자신들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7월 10일 제2차 실무 회담 시 제시한 합의서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하였다.

〈북한측 기본발언 요약〉

- 이번 회담에서 이미 이룩한 합의들을 전진시키고 대치되는 문제들을 대화를 통해 해소함으로써 개성공업지구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복구, 가동시켜야 할 것임.
- 우리(북한) 측은 남측 기업인들의 설비 점검과 생산품 및 원·부자재 반출을 원만히 보장해 주는 등 개성공업지구 재가동을 위해 모든 성의를 다하였음.
- 귀측은 중단 사태 책임이니 재발 방지 담보니 하는 일방적이며 부당한 주장들을 되풀이하는바, 개성공업지구를 재가동하고 정상화해 나갈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움.
- 개성공업지구 정상화를 위한 우리(북한) 측의 입장은 일관됨.
- 그러나 남측이 우리(북한) 측의 노력과 아량을 모독, 우롱하고 대결의 길로 나간다면 우리 역시 그에 상응하는 단호한 결심을 내리지 않을 수 없음.

쌍방은 각자 제시한 합의서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후, 서로 간에 입장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7월 17일 제4차 회담에서 만나 협의하기로 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라. 제4차 개성공단 남북당국실무회담(2013.7.17.)

(1) 개요

「제4차 개성공단 남북당국실무회담」이 2013년 7월 17일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쌍방은 제3차 실무회담에서 교환한 합의서안을 중심으로 각기 자기측 안을 설명하고, 상대측 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며 협의를 진행하였다.

(2) 진행 경과

우리측은 재발 방지 보장과 개성공단을 발전적으로 정상화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합의서에 담겨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재가동 문제 역시 재발 방지 보장을 포함한 발전적 정상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우리측 기초발언 요지〉

- 이번 회담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위해서는 이번 사태의 본질에 대해 쌍방이 인식을 같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이번 개성공단 중단 사태는 통행 차단, 근로자 철수 등 북측의 일방적인 조치에서 비롯된 것임.
- 특히 남북 간 관련된 합의가 있었음에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있음.
- 우리측은 이번 회담에서 북측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그리고 다시는 이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진지한 자세로 임할 것을 촉구함.

북한측은 공단 재가동 등에 대한 기존 입장이 반영된 합의서안을 설명하면서 자신들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특히 우리측 합의서에서 본질적 문제인 재발 방지 보장 조치와 관련해서는 진전된 입장을 보이지 않았고,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와 관련해서도 우리측 입장과 큰 차이를 보였다.

〈북한측 기본발언 요지〉

- 지난 회담에서 쌍방은 다 같이 개성공업지구가 재가동되고 정상화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음.
- 또한 어떤 경우에도 공업지구 중단과 같은 사태가 일어나면 절대로 안 된다는 데 대해서도 공감을 형성하였음.
- 그러나 공업지구 중단 사태의 책임 문제와 해결 방법 측면에서 양측이 견해를 달리하고 있음.
- 쌍방이 다 같이 노력하여 공통점은 살리고 차이점을 줄여 나가게 되면 이번 회담에서 훌륭한 결실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임.

쌍방은 서로의 입장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후 7월 22일 제5차 회담에서 재협약하기로 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마. 제5차 개성공단 남북당국실무회담(2013.7.22.)

(1) 개요

「제5차 개성공단 남북당국실무회담」이 2013년 7월 22일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개최되었다. 남북은 각기 합의서 수정안을 제시하고 상호 입장을 조율하면서 협의를 진행하였다.

(2) 진행 경과

우리측은 재발 방지에 대해 북한측이 확고히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이에 대한 북한측의 인식의 전환을 촉구하였다. 또한 개성공단이 국제적 수준의 공단으로 거듭나야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

하면서 외국 기업의 유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개성공단 남북공동 위원회」 구성 등이 포함된 우리측 합의서안을 제시하였다.

〈우리측 기초발언 요지〉

- 거듭 밝히지만 재발 방지에 대한 북측의 확고한 보장 조치 없이 개성공단 문제의 해결은 요원함.
- 개성공단을 계속 유지하고 국제적인 공단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확고한 의지임.
- 앞으로의 개성공단은 입주 기업이 신변안전과 투자자산 보호에 대한 걱정 없이 기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공단이 되어야 함.
- 또한 공단으로의 통행·통신·통관 등 기업 활동이 자유롭게 보장되고, 노무·세무·보험 제도 등에 있어서도 국제적 기준이 통용되어야 함.
- 개성공단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남북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참여 하는 공단이 되어야 함.

북측은 우리측 합의서 수정안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하며, 수정된 합의서안을 제시하였다.

〈북한측 기본발언 요지〉

- 이번 회담 결과에 따라 개성공업지구가 정상화되느냐 마느냐가 좌우되며, 나아가 공업지구 존재 여부와 북남관계 전반에 영향을 주게 될 것임.
- 지난 4차례 회담에서 공업지구 정상화를 위한 성의 있는 제안들을 내놓는 등 회담의 진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였음.
- 쌍방이 오늘 회담에서 공업지구의 정상화를 위한 좋은 합의가 이룩되기를 기대함.

제5차 실무회담에서 쌍방은 재발 방지 및 책임 소재 문제 등에 있어서 여전히 이견이 있었으나, 신변안전 보장 및 투자자산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과 국제화 등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루었다.

바. 제6차 개성공단 남북당국실무회담(2013.7.25.)

(1) 개요

「제6차 개성공단 남북당국실무회담」이 2013년 7월 25일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개최되어 핵심 쟁점인 재발 방지 보장 문제를 놓고 집중적으로 협의를 진행하였다.

(2) 진행 경과

우리측은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가동 중단 재발 방지에 대한 북측의 확고하고 실질적인 보장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였다.

〈우리측 기초발언 요지〉

- 북측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다시 공단 가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있어야 함.
- 재발 방지 및 신변안전 보장과 투자자산 보호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때 재가동에 들어가야 함.

북측은 재발 방지에 대한 우리측의 일관된 입장에 대해 성의 없다고 비난하며, 우리측 언론 보도를 문제 삼으면서 우리측이 가동 중단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입장을 반복 주장하였다.

〈북한측 기본발언 요지〉

- 공업지구 중단 사태의 원인을 해명하거나 책임 문제를 따지면 끝이 없음.
- 피해 보상 문제는 앞으로 내오게 될 공동위원회에서 협의, 해결해 나가면 될 것임.
- 통행·통신·통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과 남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야 함.
- 공업지구의 시급한 재가동이야말로 가장 좋은 피해 방지 대책임.

회담 진행 과정에서 북측은 정치·군사적 이유로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가 재발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합의서 수정안을 제시하였다. 우리측은 북측이 제시한 합의서안을 가지고는 더 이상 논의가 진전될 수 없다고 보고, 회담을 마무리하고 차기 회담 일정을 잡을 것을 제안하였다. 북측은 우리의 이러한 제안을 ‘회담 결렬’이라고 반발하면서, 재발 방지 부분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철회할 것을 주장하였다.

제6차 실무회담은 재발 방지 부분에 대한 쌍방의 입장 차이로 인해 사실상 차기 회담 일정을 잡지 못한 채 종료되었다.

한편 북측은 종결회의 직후 우리측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우리측 기자실에 난입하여 취재 기자단을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북측은 기자회견문과 회담 기본발언문, 합의서안을 배포하면서 우리측을 비난하였다.

우리측은 연락관 접촉을 통해 이러한 북측의 행태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수석대표 브리핑과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유감을 표명하였다.

사. 제7차 개성공단 남북당국실무회담(2013.8.14.)

(1) 개요

2013년 7월 28일 우리측은 통일부 장관 성명을 통해 다시는 정치적·군사적인 이유로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되어서는 안 되며, 국제적 기준에 따라 자유로운 기업 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북한이 재발 방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지 않을 경우, 기업들의 더 큰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중대한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음을 명백히 밝히면서 마지막으로 북한측에 회담을 제의하였다. 정부는 7월 29일 「제7차 개성공단 남북당국실무회담」을 제의하는 통지문을 전달하였다.

이에 북측은 8월 7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특별담화를 통해 잠정 중단 조치 해제와 출입 전면 허용, 북측 근로자의 정상 출근 보장, 신변안전 및 재산의 철저한 보호, 중단 사태 재발 방지 및 정상 운영 보장 등을 밝히면서 8월 14일에 제7차 실무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다.

우리측이 8월 8일 수석대표 명의의 전통문을 통해 북측의 실무회담 제안을 수용함에 따라 2013년 8월 14일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제7차 개성공단 남북당국실무회담」이 개최되었다.

(2) 진행 경과

쌍방은 그동안 여섯 차례의 회담을 통해 입장 차이가 컸던 재발 방지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협의하였으며,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해서도 의견을 조율하였다.

우리측은 1차 전체회의에서 합의서 수정안을 제시하고, 재발 방지 보장을 중심으로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및 국제화를 위한 조치들에 대해 설명하였다.

〈우리측 기초발언 요지〉

- 공단 가동 중단 사태의 재발 방지 보장이야말로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의 핵심 관건이자 첫 걸음임.
- 북측이 입주 기업들의 고통 경감을 위한 피해 보전 조치를 시행한다면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임.
- 개성공단과 관련한 제반 사안을 관장하는 남북당국 간 상설 협의기구로 「개성공단 공동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함.
- 개성공단의 규범과 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개선하고 해외 기업 유치를 통해 개성공단을 국제화시켜야 함.

북측은 회담에서 8월 7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특별담화에서 밝힌 내용을 중심으로 입장을 표명하였다.

〈북한측 기본발언 요지〉

- 가동 중단 사태 재발 방지와 관련하여 잠정 중단 조치를 전면 해제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공업지구의 정상 운영을 보장하도록 함.
- 공업지구에 대한 남측 기업인들의 출입을 전면 허용하고 북측 근로자들의 정상 출근을 보장함.
- 남측 기업인들의 신변안전을 보장하며, 재산을 철저히 보호한다는 것을 명백히 담보함.

이후 쌍방은 세 차례의 수석대표 접촉을 통해 우리측 수정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조율하였고, 재발 방지 보장과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구성 등 5개 항에 합의하고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합의서 요지〉

- 남과 북은 개성공단 중단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상적 운영을 보장
- 신변안전 보장, 투자자산 보호, 통행·통신·통관 문제의 해결
- 국제적 수준의 기업 활동 보장,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공단으로 발전
-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구성·운영, 산하에 필요한 분과위원회 설치
- 출입·체류 및 투자자산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기업들의 재가동을 위해 적극 노력

2.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회의

가. 제1차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2013.9.2.)

(1) 개요

남북은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8.14.)에 따라 8월 19일부터 28일까지 판문점 연락관 채널을 통해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구성 문제를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하였다.

그리하여 8월 28일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고, 8월 29일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합의서 서명본을 교환하였다.

〈합의서 요지〉

- 공동위원회는 남북 각각 위원장 1명, 위원 5명으로 구성
- 공동위원회는 개성공단과 관련한 남북 사이의 합의 사항 이행을 총괄하고, 산하 분과위원회 활동을 조정
- 공동위원회는 분기 1회 개최를 원칙, 쌍방 위원장이 공동 운영
- 공동위원회 산하에 「출입·체류 분과위원회」, 「투자보호 및 관리운영 분과위원회」, 「통행·통신·통관 분과위원회」, 「국제경쟁력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
- 공동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 구성·운영

한편 우리측은 8월 28일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 명의의 통지문을 통해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를 9월 2일 개성공단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다. 북측이 8월 29일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총국) 부총국장 명의의 통지문을 통해 동의해 오에 따라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가 9월 2일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쌍방 대표단 명단(제1차~3차)〉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위원장	김기웅(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	박철수(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
위 원	홍진석(통일부 과장) 허진봉(통일부 과장) 박병귀(기획재정부 팀장) 전제구(산업통상자원부 팀장)	류창만(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처장) 원용희(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장) 황충성(민족경제협력위원회 참가) 황정무(조선적십자 중앙위원회 위원)

(2) 진행 경과

우리측은 첫 발언을 통해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에 대한 우리측 구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제도 개선과 피해 보상, 공단 재가동 및 상설 사무처 등 당면한 주요 현안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공단 재가동 일정에 대해 우리측은 군 통신선 복구와 전력·용수 등 기반 시설 정비, 3통 등 제도적 장치 마련에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상설 사무처 구성과 관련하여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안)」를 북측에 제시하였다. 우리측은 또한 공단 가동 중단으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 보전을 위해 일정 기간 세금을 면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측 기초발언 요약〉

- 어떠한 경우에도 공단 가동이 중단되어서는 안 되며, 신변안전과 통행이 보장되고 투자자산이 보호되는 안정적인 안전한 공단으로 만들어 나가야 함.
- 통행·통신·통관을 비롯하여 각종 제도들을 상식과 국제 규범에 맞게 개선해 나가야 함.
- 외국 기업 투자 유치, 공단 운영 질서 정립, 경영 및 근로 환경 개선을 통해 경쟁력 있는 공단으로 육성해 나가야 함.
- 개성공단과 관련한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 중심 협의체로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를 운영하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들은 분과위원회에 위임하여 협의하도록 함.
- 공동위원회의 본격적 활동을 위해 최대한 빠른 시기에 사무처를 개소할 수 있어야 함.
- 공단 재가동과 관련하여 가장 시급하고 당면한 문제는 서해 군 통신선의 복구임.
- 가동 중단에 따른 기업들의 피해 보상을 위해 일정 기간 세금 면제 조치가 필요함.
- 공단 재가동 등 상황을 지켜보면서 외국 기업을 대상으로 공동 투자설명회를 개최할 것을 제의함.

북측은 공단의 조속한 재가동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공동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상설 사무처의 구성과 활동 방식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피해 보상 문제와 관련하여 북측은 4월 이후 발생한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 문제를 제기하였다. 우리측이 제시한 사무처 구성·운영 합의서안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내용을 수용했으나 일부 조항에 대해 이견을 표시했다. 3통 문제 해결과 관련하여서는 주로 기술적 부분에 관하여 논의가 이루어졌다.

〈북한측 기본발언 요지〉

- 그동안 쌍방은 문서교환 방식을 통해 공동위원회 구성·운영 합의서에 대해 충분한 의견을 나누고 견해의 일치를 보았음.
- 공동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상설 사무처의 구성과 활동 방식 및 분과위원회 운영 일정을 합의서에 따라 확정해야 함.
- 통행·통산·통관 문제를 비롯하여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협의·대책하기로 한 문제들을 확정하고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 좋은 결실을 마련해 나가자는 입장임.
- 재가동 문제와 관련하여 입주 기업들의 생산 설비 정비가 끝나면 재가동을 위한 필요한 조건이 다 갖추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음.

쌍방은 조속한 공단 재가동의 필요성에 공감하였지만 재가동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 조치 등에 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양측은 공단 재가동 문제를 비롯하여 피해 보상 문제와 상설 사무처 구성·운영 합의서 등을 공동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제도 개선과 관련한 기술적 문제 등 구체적 사항들은 해당 분과위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나. 제2차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2013.9.10.~9.11.)

(1) 개요

남북은 제1차 회의에서 합의한 대로 2013년 9월 10일 개성공단 종합지원 센터에서 「제2차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제2차 회의에서 쌍방은 9월 4일과 9월 5일에 개최된 공동위원회 산하 4개 분과위원회(투자보호 및 관리운영, 국제경쟁력, 출입·체류, 통행·통신·통관)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협의를 진행하였다.

(2) 진행 경과

우리측은 출입·체류와 3통 등 제도 개선 문제와 입주 기업 피해 보상, 재가동 일정 등에 중점을 두고 협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남측에 있는 외국 기업과 주한 외국 상공인을 대상으로 공동 투자설명회를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다. 사무처 구성·운영과 관련하여서는 행낭과 휴대폰 반·출입 등에 있어서 당국 간 회담 대표단 수준으로 보장할 것을 북측에 요구하였다.

〈우리측 기초발언 요지〉

- 출입·체류 부속합의서와 관련하여 우리측 인원의 신변안전과 무사 귀환, 조사 과정에서의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함.
- 금년 내로 전자출입체계(RFID)를 도입하여 1일 단위 통행의 편의를 제공하고, 시범적으로 인터넷을 제공할 것을 제안함.
- 기업들의 피해 보상 문제와 관련한 기본 방향을 확정 짓고, 북측 근로자 임금 문제 등은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중국 간에 처리토록 위임하기를 제안함.
- 기업들이 체류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면 시운전과 부분 가동을 거쳐 준비가 갖추어지는 대로 희망하는 기업부터 재가동에 들어가도록 함.
- 근로자 수급 문제, 노무·임금·근로 환경 개선 문제, 산업 재해 및 각종 사건·사고 예방 및 사후 처리 문제 등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과제들을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하기를 바람.

북측은 재가동 시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의하면서 우리측이 제시한 의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1일 단위 상시 통행과 인터넷·이동전화 공급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분과위에서 계속 협의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공동 투자설명회와 사무처 활동 보장과 관련해서는 우리측 제안을 수용하였다.

〈북한측 기본발언 요지〉

- 서해 군 통신선이 회복되고, 기업의 설비 점검과 재가동 준비가 기본적으로 완료되었음.
- 공동위원회가 공업지구를 정상화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현실적이고 명백한 결과물을 내놓는 협의체로 되게 하여야 할 것.
- 당면하여 제기되는 상설 사무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합의를 조속히 체결하고, 사무처가 자기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어야 함.

쌍방은 전체회의와 공동위원장 접촉 등 총 10차례의 접촉을 진행한 끝에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와 「개성공단에서의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이행을 위한 부속합의서」를 체결하였다. 또한 1일 단위 상시 통행 실시를 위한 전자출입체계(RFID) 도입, 공동 투자설명회 개최, 기업 피해 보상 문제 등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공동발표문 형식으로 채택하였다.

〈공동발표문 요지〉

-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고, 9월 중 사무처를 가동하기로 함.
- 「개성공단에서의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이행을 위한 부속합의서」를 체결하였음.
- 금년 내 전자출입체계(RFID)를 도입하여 1일 단위 상시 통행 실시, 인터넷·이동전화 통신 제공을 위한 실무적 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함.
- 남측 지역 외국 기업과 외국 상공인 대상 투자설명회를 10월 중 개성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음.
- 출입·체류 관련 부속합의서 초안을 교환하였으며 동 문제를 계속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함.
- 기업들이 개성공단에서 납부하는 2013년 세금을 면제하며, 북측 근로자들의 임금 정산은 총국과 관리위원회가 협의하여 처리하기로 함.
- 9월 16일부터 기업들이 시운전을 거쳐 재가동에 들어가기로 함.

다. 제3차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2013.9.16.)

(1) 개요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제3차 회의」가 2013년 9월 16일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개최되었다. 남북은 전체회의 2회, 공동위원장 접촉 1회, 출입·체류 분과위원장 접촉 2회를 병행하면서 출입·체류 부속합의서, 전자출입체계(RFID) 구축 방안과 추진 일정, 공동 투자설명회,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상설 사무처 개소 문제를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하였다.

(2) 진행 경과

우리측은 출입·체류 부속합의서, 통행·통신·통관 합의 사항 이행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였다. 특히 개성공단 정상화와 관련하여 공단에 출입,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관련 부속합의서의 타결을 북측에 촉구하였다.

〈우리측 기초발언 요지〉

- 우리측 인원의 안전한 출입·체류는 공단 정상화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문제임.
 - 출입·체류 합의서 제10조의 피조사자의 기본적 권리 보장과 관련하여 그 내용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측 인원들에 대한 조사 과정에 우리측 인원 입회 △피조사자의 기본적 권리 보장 △합리적 기간 내 조사 진행 등이 필요함.
- 출입·체류 합의서 제10조의 피조사자의 기본적 권리 보장과 관련하여 그 내용을 구체화하는 등 논의가 진전되어 출입·체류 부속합의서가 타결될 수 있기를 기대함.
- 전자출입체계(RFID) 구축을 위한 우리측 기본 방안에 대해 귀측의 입장을 밝혀주기 바람.
- 공단 상사중재위원회 구성을 위해 정해진 기간 내에 명단을 교환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임.
- 상설 사무처 개소와 관련 제반 실무 협의를 다음 주 진행할 것을 제의함.

북측은 통신·통관, 출입·체류 문제에 대해 분과위에서 주장했던 기존 입장을 고수하였다. 아울러 노무, 세무, 노임 등의 개선 문제를 비롯하여 앞으로 더 협의해야 할 문제도 남아있다고 밝혔다.

〈북한측 기본발언 요지〉

- 지금까지 개성공업지구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들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일련의 합의서도 채택됨.
- 상시 통행 보장을 위한 현실적 조치가 취해진 것은 팔목할 만한 성과라고 봄.
- 통신·통관 문제, 출입·체류 문제, 공업지구 관리운영에서의 노무·세무·노임 등의 개선 문제를 비롯하여 앞으로 더 협의해야 할 문제들도 남아 있음.
- 앞으로 공업지구의 정상적 발전을 위한 협의들에서 서로 적극적인 협력과 노력으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해 나가야 할 것임.

쌍방은 전체회의, 공동위원장 접촉, 출입·체류 분과위원장 접촉 등을 병행하며 입장을 조율한 끝에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 개소를 위한 실무협의를 9월 24일, 공동 투자설명회는 10월 31일 개성공단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또한 제4차 공동위원회 회의 일정은 분과위원회 협의 결과를 지켜본 후 결정하기로 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라. 제4차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2013.12.19.)

(1) 개요

2013년 12월 12일 북측은 「제4차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를 12월 19일 개성공단에서 개최하자는 통지문을 전달해 왔다. 12월 13일 우리측이 북측의 제안에 동의함에 따라 「제4차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회의가 12월 19일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위원장	김기웅(통일부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장)	박철수(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
위 원	홍진석(통일부 과장) 허진봉(통일부 과장) 나원창(기획재정부 과장) 전제구(산업통상자원부 팀장)	류창만(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처장) 원용희(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장) 황충성(민족경제협력위원회 참사) 황정무(조선적십자 중앙위원회 위원)

* 남북협력지구지원단이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으로 바뀌었음.

(2) 진행 경과

쌍방은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와 재가동 이후 남북 간 합의 사항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과제들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였다.

우리측은 전자출입체계(RFID) 공사의 완료를 통한 1일 단위 상시 통행 실시와 인터넷 서비스 제공 등 3통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북측에 촉구하였다. 또한 출입·체류 부속합의서 체결과 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설명하였다. 또한 10월 말 예정되었다가 취소된 공동 투자설명회를 2014년 1월 말에 개최할 것을 제안하였다.

〈우리측 기초발언 요지〉

- 전자출입체계(RFID) 공사를 조속히 완료하고 내년 1월 중순경에 1일 단위 상시 통행이 실시되도록 해야 할 것임.
- 통관절차 간소화를 위해 선별검사를 도입하고, 기업의 편의성과 보안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에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안전한 출입·체류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출입·체류 부속합의서」의 조속한 체결을 바람.
- 연기되었던 공동 투자설명회를 내년 초에 개최할 것을 제안함.
- 상사중재위원회 위원 명단 교환 등의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1월 중 상사중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함.

북한측도 전자출입체계 공사와 통관 현장 방문 등 합의 사항의 이행 현황을 평가하면서, 노무·임금 등 관리 운영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제시하였다.

〈북한측 기본발언 요약〉

- 개성공업지구를 발전시키기 위해 북한측은 서해 군 통신선 재개, 전자출입체계 도입과 관련한 실질적 조치,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노력 등을 다하고 있음.
- 쌍방 사이에 인터넷 및 이동전화 통신 보장 문제, 공업지구 노임 수준과 세무·회계 제도 등을 국제적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문제 등 앞으로 협의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 있음.
- 2014년에 공업지구 발전을 위해 북과 남이 공동으로 진행할 사업 방향에 대해 협의하는 것도 필요함.

쌍방은 인터넷 제공 방식, 출입·체류 부속합의서 채택, 노무·임금 등 관리 운영 문제와 관련하여 이견이 있는 사안에 대해 분과위원회를 통해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3.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 회의

가. 통행·통신·통관 분과위원회

(1) 개요

「통행·통신·통관 분과위원회」는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개성공단의 통행·통신·통관을 원활히 하기 위한 문제들을 협의하는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이다.

「통행·통신·통관 분과위원회」는 2013년 9월 5일, 9월 13일, 11월 29일 세 차례 개최되었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위원장	홍진석(통일부 과장)	리선권(조선인민군 대좌)
위 원	최인용(국방부 단장) 심훈보(통일부 과장) 남승현(국방부 중령) 박태희(미래창조과학부 사무관)	림룡문(조선인민군 상좌) 장비수(조선인민군 상좌) 홍석일(조선인민군 상좌) 리영민(조선인민군 중좌)

(2) 진행 경과

9월 5일 제1차 회의에서 남북은 전자출입체계(RFID) 구축을 통한 1일 단위 상시 통행 실시, 통관절차 간소화를 위한 선별검사, 인터넷 및 이동전화 서비스 공급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였다.

남북은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첫 조치로써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9월 6일부터 재개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위해 오전 9시에 시험통화를 하기로 하였다.

9월 13일 제2차 회의에서 남북은 전자출입체계(RFID) 구축 방안, 인터넷 및 이동전화 제공 문제, 선별검사 등에 관한 기술적인 문제들을 논의하였다.

우리측은 전자출입체계(RFID) 구축 이전이라도 기업인들의 편의를 위해 지정 시간대에 통행하지 못한 인원에 대한 당일 입·출경을 허용해 줄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북한측은 9월 16일부터 지정 시간대에 통행하지 못한 인원이 북측 통행 검사소에 통지하는 경우 벌금 부과 없이 다른 시간대에 통행을 보장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인원과 차량의 동시 검사로 통관 시간을 단축하고, 개인이 소량

으로 반입하는 휴대품의 경우 구두 신고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1월 6일 우리측은 우리 공동위원장 명의로 통지문을 보내 남북공동위원회와 산하 분과위원회들을 개최할 것을 북한측에 제의하였으나, 북한측의 거부로 「통행·통신·통관 분과위원회」는 열리지 못하였다.

이에 정부는 11월 25일 우리측 통행·통신·통관 분과위원장 명의로 통지문을 통해 조속히 분과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북한측에 재차 촉구하였는바, 북한측이 우리측 제안에 동의해 옴에 따라 11월 29일 제3차 회의가 개최되었다.

협의 결과 남북은 12월 첫째 주부터 전자출입체계(RFID) 공사를 시작하고, 북측 통관시설에 대한 현장 방문을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인터넷 연결 등을 위한 통신 및 군 통신 분야 실무협의를 개최하여 세부적인 문제들을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러한 합의에 따라 12월 6일 개최된 통신 분야 실무협에서 남북은 인터넷 연결 방식 등 기술적 문제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였다.

나. 출입·체류 분과위원회

(1) 개요

「출입·체류 분과위원회」는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개성공단을 왕래하는 인원 및 수송 수단의 출입과 체류의 편의, 신변안전 보장과 관련해 제기되는 문제들을 협의하는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이다.

「출입체류 분과위원회」는 2013년 9월 5일, 9월 13일, 9월 26일, 11월 14일 네 차례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위원장	허진봉(통일부 과장)	리창일(개성공업지구 출입국사업부 과장)
위 원	신혜성(통일부 서기관) 최원연(통일부 사무관) 장소영(법무부 검사)	배봉국(개성공업지구 출입국사업부 과장) 오한철(개성공업지구 출입국사업부 지도원) 황성호(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참사)

(2) 진행 경과

9월 5일 제1차 회의에서 우리측은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2004.1.29. 체결, 2005.8.1. 발효)에 규정되어 있는 신변안전 보장에 관한 기본권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부속합의서의 체결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우리측은 부속합의서안을 제시하면서 신변안전 보장과 조사 시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설명하였다. 북한측도 부속합의서 체결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 부속합의서안을 제시하고 협의를 진행하였다.

이후 진행된 3차례(9월 13일, 9월 26일, 11월 6일)의 「출입·체류 분과위원회」에서는 쌍방이 제시한 부속합의서안에 대해 조율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위법행위 발생 시 입회 등 조사 방법 및 통지 절차, 조사 시 보장되는 기본권 내용, 그리고 위법 행위 예방 대책 등에 관해서는 일정 부분 의견 접근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북한측이 부속합의서 적용 범위와 관련하여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의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최종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였다.

다. 투자보호 및 관리운영 분과위원회

(1) 개요

「투자보호 및 관리운영 분과위원회」는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투자자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법행위 발생 시 공동 조사, 손해배상 등 상사분쟁 문제들과 노무·세무·임금·보험·환경보호를 비롯하여 개성공단의 관리운영을 국제적 기준에 맞게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문제들을 협의하는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이다.

「투자보호 및 관리운영 분과위원회」는 2013년 9월 4일과 11월 13일 두 차례 개최되었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위원장	박병귀(기획재정부 팀장)	류창만(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처장)
위 원	이상규(통일부 과장) 이혜련(통일부 사무관) 고승진(산업통상자원부 사무관) 이창주(고용노동부 사무관)	오광욱(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참사) 김동일(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참사)

* 제2차 회의 시 북측 대표단 2명 추가 : 조광혁(미상), 리명덕(미상)

(2) 진행 경과

9월 4일 제1차 회의에서 우리측은 개성공단에서 발생하는 위법행위와 손해배상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성공단 상사중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북한측은 중재 기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였고,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협의해 나가기로 하고 회의를 종료하였다.

제1차 회의 이후 9월 10일 개최된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제2차 회의」

에서 「개성공단에서의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이행을 위한 부속합의서」가 타결되었다.

이로부터 약 한 달 뒤인 11월 13일 「투자보호 및 관리운영 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가 열렸다.

제2차 회의에서는 상기 합의서 이행 문제가 협의되어 3개월 내인 12월 11일까지 쌍방 상사중재위원 명부를 교환하고, 6개월 내인 2014년 3월 11일까지 중재인 명부를 교환하기로 하였다.

이 밖에 우리측은 근로자 부족과 세금 세척 문제 등을 제기하였고, 북한측은 임금 체불과 기업회계 투명성 문제 등을 제기하였다.

라. 국제경쟁력 분과위원회

(1) 개요

「국제경쟁력 분과위원회」는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외국 기업의 유치, 해외 공동 투자설명회 개최, 개성공단 제품의 제3국 수출 시 특혜관세 인정 등 개성공단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문제들을 협의하는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이다.

「국제경쟁력 분과위원회」는 2013년 9월 4일, 11월 13일 두 차례 개최되었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위원장	전제규(산업통상자원부 팀장)	원용희(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장)
위 원	박상규(통일부 과장) 여소영(외교부 서기관) 조혜실(통일부 사무관) 김정애(기획재정부 사무관)	전광철(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참사) 림태봉(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참사)

* 제2차 회의 시 우리측 대표단 1명 교체 : 김정애 → 이우형(기획재정부 사무관)

(2) 진행 경과

9월 4일 제1차 회의에서 우리측은 외국 기업 투자 유치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투자 안정성이 보장되고 국제적 수준의 기업 경영 환경이 구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그간 FTA 협상에서 개성공단 제품의 역외 가공지역 인정을 위한 우리측의 노력을 언급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임금 직불 제도 도입과 노동환경 개선 등 북한측의 노력도 중요함을 설명하였다.

북한측은 개성공단의 각종 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우리측 제안에 대해 동의를 표하면서, 「투자보호 및 관리운영 분과위원회」의 논의 상황을 지켜보며 지원하자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서울에 진출해 있는 외국 기업과 외국 상공인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자는 우리측 제의에 대해 북한측이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함에 따라, 쌍방은 동 사안을 9월 10일 개최될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제2차 회의」 발표문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다.

11월 13일 제2차 회의에서도 남북은 공동 투자설명회 개최와 해외 공동 시찰 등 개성공단 국제화 방안들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였다.

특히 우리측은 3통과 출입·체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개성공단에 대한 외국 기업의 투자나 역외 가공지역 인정 같은 국제화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을 북한측에 강조하였다.

남북은 차기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고 회의를 종료하였다.

제4장

남북 인도 분야 회담



1. 남북적십자실무접촉(2013.8.23.)

가. 개요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추석을 전후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북한측에 제안하였다. 이후 정부는 경축사 후속 조치로 북한에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을 제의하였고, 북한이 이 제의를 수용함으로써 2010년 10월 남북적십자회담 이후 약 3년 만에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적십자실무접촉」이 8월 23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개최되었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이덕행(대한적십자사 실행위원)	박용일(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대 표	김성근(대한적십자사 국장) 송혜진(대한적십자사 실행위원)	김영철(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 조정철(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부부장)

나. 진행 경과

우리측은 보다 많은 이산가족들에게 상봉의 기회를 주는 동시에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북한측에 제시하였다.

이산가족 상봉 규모를 100가족에서 200가족으로 확대하여 서울과 평양을 교환 방문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화상 상봉도 추석 전에 실시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 매년 3회 이상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매월 일정 규모의 생사·주소 확인 및 서신 교환 등 실천적 방법들을 제안하였다.

특히,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 해결의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강조하면서 이산가족 생사확인 의뢰 대상자를 확대하여 이들의 상봉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을 강하게 요구하였다.

〈우리측 기초발언 요약〉

-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 규모를 종전보다 확대하여 남북 각각 200명씩 총 400명으로 할 것을 제의함.
- 상봉 시기는 추석 이후인 10월 중으로 하되 상봉 인원이 많은 만큼 두 차례로 나누어 서울과 평양을 동시 교환 방문하는 방식으로 함.
- 화상 상봉은 과거의 예에 따라 남북 각각 40가족 정도로 하되 시기는 추석 전에 실시함.
-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 설, 8·15, 추석 등을 계기로 최소 연 3회 정례적인 상봉을 실시하면서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을 제의함.
- 아울러 올해 12월부터 매월 남북 각각 500명 규모로 전면적 이산가족 생사·주소 확인 사업을 추진하고 내년 1월부터 남북 각각 1,000명 규모로 이미 상봉을 한 가족들끼리 서신 교환을 실시할 것을 제의함.
- 전쟁 시기 및 그 이후 시기 소식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의 문제도 해결해야 하는바, 이들의 생사와 주소를 확인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봄.

우리측의 제의에 대해 북한측은 기존 관례대로 남북 각각 100명씩 금강산에서 상봉 행사를 진행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우리측이 제의한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 및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들에 대해서는 적십자 본회담이 아닌 실무접촉에서 다루기가 적절하지 않다면서 논의를 회피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북한측 기본발언 요지〉

- 추석 계기 흠어진 가족·친척들의 금강산 상봉은 9월 말로 하며 상봉 규모는 지난 시기처럼 100명 규모에서 준비, 상봉 형식과 방법, 상봉 후보자 생사 확인, 최종 명단 교환은 지난 시기 관례에 따라 진행하면 될 것임.
- 상봉자들이 고령인 점을 고려하여 거동이 불편한 상봉자에 한해 동반 가족을 붙이되 50명을 넘지 않도록 하며, 상봉 시작 5일 전에 선발대 사업을 실시함.
- 상봉 준비를 위해 금강산 면회소를 시급히 보수·정비하여야 할 것임.
- 10·4 선언 발표일에 즈음한 10월 하순경에 흠어진 가족·친척들의 화상 상봉을 북남 각각 40가족씩 실시함.
- 상봉 후보자 생사·주소 확인 의뢰서와 회보서, 최종 명단 교환은 관례대로 교환하며 화상 상봉을 위한 영상 시험은 화상 상봉 시작 7일 전부터 실시함.

두 차례에 걸친 전체회의와 다섯 차례의 수석대표 접촉 끝에 남과 북은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 행사 등 4개 항목으로 이루어진 합의서를 도출하였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9월 25일부터 30일까지 금강산에서 진행하고 그 규모는 남북 각각 100가족씩 하기로 하였으며, 이산가족 생사확인 의뢰서 규모는 기존 200명에서 250명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또한 추석 계기 상봉 행사가 끝난 후 11월 중에 한 차례 더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개최하기로 하고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실무접촉을 갖는 데에도 합의하였다.

한편 화상 상봉은 추석 후 10월 22일부터 10월 23일 이틀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합의서 요지〉

1.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 행사 실시
 - ① 일시 및 장소 : 9.25.~30., 금강산
 - ② 상봉 규모 : 남과 북 각각 100명
 - ③ 사전 절차 : 생사확인 의뢰서(8.29.), 회보서(9.13.), 최종 명단(9.16.) 교환
* 의뢰서 규모는 남과 북이 200명~250명 각기 편리한 대로 진행
2. 화상 상봉 행사는 10.22.~23. 남북이 각각 40가족씩 실시
3. 11월 중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한 차례 더 진행, 이를 위한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개최
4. 남과 북은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생사 확인, 서신 교환 실시 등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

그러나,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불과 나흘 앞둔 9월 21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방적으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연기한다고 발표함으로써 3년 만의 이산가족 상봉은 무산되었다.

부록

1. 남북관계 주요 일지
2. 남북회담 합의서



1. 남북관계 주요 일지

2013년		
월	일	주요 일지
2	25	• 박근혜 대통령 취임사 - “북한은 하루빨리 핵을 내려놓고, 평화와 공동 발전의 길로 나오기 바람.” - “현재 우리가 처한 안보 상황이 너무도 엄중하지만 여기에만 머물 수는 없음.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로 행복한 통일 시대의 기반을 만들고자 함.” - “확실한 역지력을 바탕으로 남북 간에 신뢰를 쌓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 “서로 대화하고 약속을 지킬 때 신뢰는 쌓일 수 있음. 북한이 국제사회의 규범을 준수하고 올바른 선택을 해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진전될 수 있기를 바람.”
	27	• 北 조선신보, 대통령 취임사(2.25.) 이후 첫 반응 - “핵 문제를 대화·접촉의 전제 조건으로 걸면 아무런 진전이 없다는 것이 과거 5년의 교훈”이라고 하며, “새 집권자가 전임자의 전철을 밟지 말 것”을 강조

2013년		
월	일	주요 일지
3	1	• 박근혜 대통령 3·1절 경축사 -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도발을 중지할 때, 남북한 공동 발전의 길이 열릴 것이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도 제대로 진행해 나갈 수 있을 것임.”
	5	• 北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 - 韓美 합동 군사훈련 관련 △2차·3차 대응 조치, △조선정전 협정 백지화,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활동 중지 및 판문점 북미 군부 전화 차단 등 중대 조치 주장·발표
	6	• 국방부, ‘北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3.5.)에 대한 입장’ 발표 -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경우, 우리 군은 도발 원점과 지원 및 지휘 세력까지 강력하고 단호하게 응징할 것임.”
	7	• 北 외무성 대변인 성명 - 유엔(UN) 안보리 제재 및 韓美 합동 군사훈련 관련, “외교적 기회는 사라지고 군사적 대응만 남았다”며 ‘핵 선제타격 권리 행사’ 등 위협
	8	• 유엔(UN)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2094호」 채택 -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고, 대북 제재의 범위와 강도를 강화 • 北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 - ‘△북남 사이의 불가침에 관한 모든 합의 전면 폐기, △비핵화 공동선언 완전 백지화, △판문점 연락 통로 차단’ 등 주장 • 통일부 대변인 논평 - “조평통의 「남북 간 불가침에 관한 합의」 및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대한 파기 선언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함.” - “모든 합의를 인정하고 존중함으로써 남북 간 신뢰를 쌓아가는 길에 나서야 할 것임.”

2013년

월	일	주요 일지
3	8	- 국방부 대변인 브리핑 “북한이 핵무기로 한국을 공격한다면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인류의 의지로 김정은 정권은 지구상에서 소멸될 것임.” - 박근혜 대통령, 국군장교 합동 임관식 축하 “북한의 도발에는 강력히 대처할 것임. 그러나, 북한이 변화의 길로 나선다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적극 가동해서 남과 북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기반과 조국 통일의 길을 탄탄히 닦아 나갈 것임.”
	9	- 北 외무성 대변인 성명 “안보리 결의 규탄 및 전면 배격, 핵보유국 지위와 위성 발사국 지위 영구화”등 주장
	11	北, (KR 훈련 관련)판문점 남북직통전화 차단
	21	- 北 최고사령부 대변인, 조선중앙통신(중통) 기자 문답 - B-52 폭격기 비행 훈련 및 핵잠수함 훈련 참가는 “미국의 노골적인 핵공갈과 위협”, “우리도 그에 상응한 군사적 행동으로 넘어가게 될 것”등 위협 - 제22차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 채택 △북한에서의 인권침해 규탄,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임무 1년 연장,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설치 등
	22	- 北 외무성 대변인 중통 기자 문답 ‘유엔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 전면 배격’ 주장 - 정부, 유진벨재단 결핵 약품(6억 7,800만 원 상당) 대북지원 승인
	26	- 北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성명 “1호 전투근무태세 진입, 남측 당국자들에게도 우리(北) 군의 초강경 의지를 물리적 행동으로 보여주게 될 것”등 위협 - 北 조평통 대변인 성명 - 소위 김父子 동상 타격 관련, “청와대 안방에서 풍겨내는 독기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청와대를 비롯한 대결·모략 소굴들을 짓무게 버릴 것” 등 주장

2013년		
월	일	주요 일지
3	26	- 北 외무성 성명 - ‘韓美 핵전쟁 상황 조성(B-52 폭격기 훈련, 소위 김父子 동상 타격 발언 등) 안보리 통고, 전면 대결전의 최후 단계 진입’ 등 위협
	27	「남북장성급군사회담」 북측 단장, 대남 통지문 발송 - ‘남북 군 통신 단절 및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군 통신연락소 북측 인원 활동 중지’
	30	- 北 정부·정당·단체 특별성명 발표 - “남북관계는 전시 상황에 돌입, 군사적 도발 시 전면·핵전쟁으로 번지게 될 것” 등 위협 - 北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 담화 - “우리의 존엄을 훼손하려 든다면 공업지구를 차단·폐쇄해 버리게 될 것”이라고 위협
	31	- 北 당중앙위 전원회의 개최 -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 회의(4.1.)에 제출할 간부 문제 및 조직 문제에 대한 의정들을 상정하고 ‘경제핵무력 병진 노선’ 채택
4	1	- 北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 회의 개최 - △‘자위적 핵보유 지위 공고화’ 관련 법 및 ‘국가우주개발법’ 채택, △박봉주 총리 임명 등
	2	- 北 원자력총국 대변인, 중통 기자 답변 - ‘영변의 모든 핵시설 및 무력화된 5MW 흑연 감속로 재정비·재가동 조치 실행’ 주장
	3	北, 개성공단 출경 차단(北에서 南으로의 입경만 허용)
	4	-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 담화 - 미군 무력 증강(B-52·F-22 편대 등) 배치 관련, “무자비한 작전이 최종 검토·비준된 상태에 있음을 정식으로 펜타곤에 통고”한다고 위협

2013년

월	일	주요 일지
4	4	- 北 조평통 대변인, 중통 기자 답변 - “南 보수 언론이 못된 입질을 계속한다면 北 근로자들을 전부 철수시키겠다”고 위협
	5	北 외무성, 평양 주재 외교단·국제기구 등에게 4.10.까지 출국 권고
	8	- 北 김양건 당 비서, ‘개성공업지구 사태와 관련한 중대 조치를 취함에 대하여’ 담화 발표 - “△개성공업지구 종업원 전부 철수, △개성공업지구 사업 잠정 중단, 존폐 여부 검토”
	9	- 北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 대변인 담화 - “남한에 있는 모든 외국인들은 사전 대피 및 소개 대책 세워야 할 것” 위협
	11	- 통일부 장관 성명 - “개성공단 정상화는 대화를 통해 해결되어야 하며, 북한 당국은 대화의 장으로 나오기 바람.”
	12~13	美 존 케리 국무장관 방한
	13	- 韓·美 외교장관회담 공동성명 -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9·19 공동성명에 따른 공약을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음”
	14	- 北 조평통 대변인, 중통 기자 답변 - 대화 제의(4.11.)는 ‘교활한 술책’이며, “앞으로 대화가 이루어지는가 마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남측의 태도 여하에 달려 있다”고 주장
	16	- 北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비망록 - 개성공단 잠정 중단 책임을 우리측에 전가 - 북한군 최고사령부 최후통첩장 - “진실로 대화와 협상을 원한다면 반공화국 적대행위에 대해 사죄하고 전면 중지하겠다는 실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 이라고 주장

2013년		
월	일	주요 일지
4	16	- 北 외무성 대변인 담화 - 미국의 대화 제의는 ‘교활한 술책’이며, “미국이 적대시 정책과 핵위협을 포기하지 않는 한 대화는 핵 억제력을 갖춘 후에나 가능”하다고 주장
	18	- 北 국방위 정책국 성명 - “대화와 협상을 바란다면 △유엔(UN) 제재 철회, △핵전쟁 연습 중지 선언, △핵전쟁 수단 전면 철수 등의 실천적 조치들을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 - 北 조평통 대변인 담화 - “최고 존엄을 모독하고, 북침 전쟁연습에 매달리며, 제재 책동에 광분하는 한 그 어떤 대화도 있을 수 없다”고 주장
	25	- 통일부 대변인 성명 - “개성공단 근무자들의 인도적 문제 해결과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당국 간 실무회담 개최를 북한 당국에 공식 제의” - “북한이 당국 간 회담마저 거부한다면, 중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음.”
	26	- 北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 담화 - 4.25. 회담 제의는 “우리를 우롱하는 최후통첩식 중대 조치”라고 비난하며, “우리가 먼저 중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위협 - 대한민국 정부 성명 - “정부는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잔류 인원 전원을 귀환시키는 불가피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음.” - “입주 기업들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지원을 다해 나갈 것임.”
	27	- 北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 답변 - “개성공업지구가 완전히 폐쇄되는 책임은 전적으로 남측이 지게 될 것”이라며 비난

2013년

월	일	주요 일지
5	3	•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위원장 등 7명, 북한과 임금·세금 문제 등 협의 후 귀환 - 개성공단 기업 관계자 4,27., 4,29. 2차례에 걸쳐 169명 귀환
	5	• 北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 중통 기자 답변 - “北에 대한 모든 적대 행위와 군사적 도발을 중지하는 조치부터 취해야 할 것”이라며 “바로 여기에 개성공업지구 운영이 정상화되는 길이 있다”고 주장
	8	• 韓·美 정상회담,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문” 발표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등을 통하여 북한이 국제사회의 의무를 준수토록 함과 동시에,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속 노력”
	14	• 통일부 대변인 성명 - 개성공단 원·부자재와 완제품 반출 등 관련 남북당국 간 실무회담 개최를 북측에 제의
	15	• 北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 중통 기자 회견 - “우리(北) 측은 5.3. 南 인원 철수 때 남측에 관계자 출입과 입주 기업가 방문, 물자 반출 허용 의사 표명 및 날짜까지 제시”했다고 주장
	16	• 통일부 대변인 브리핑 - “5.3. 북측 관계자가 미수금 정산 및 시설 관리 등을 위한 방북은 허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남측과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한 것은 사실이나 날짜를 제시한 바는 전혀 없음.”
	18~20	• 北, 동해안 일대에서 단거리 발사체 발사
	19	• 통일부 대변인 성명 - “북한이 자재·제품 반출 문제의 협의 용의를 표명했다고 주장하나, 사실상 협의가 불가능한 시점에야 제기된 것으로서 진정성이 의심스러움.”

2013년		
월	일	주요 일지
5	19	- “협의를 위한 구체적인 날짜까지 제시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20	- 北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 조선중앙통신 기자 대답 - “지금 개성공업지구에 남아있는 제품의 반출보다 더 절박한 것은 공업지구가 깨지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라고 하며 “여기에 남북관계의 전도가 달려 있다”고 주장
	21	- 통일부 대변인 논평 - “북한이 개별 기업들에 팩스를 보내 우리 정부와 기업 간 갈등을 유발시킴으로써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임.”
	22~24	• 최룡해 북한군 총정치국장 방중
	22	• 6·15 공동선언 실천 북측위원회, ‘6·15 공동행사’를 개성 또는 금강산에서 개최하자고 제의
	25	• 北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 담화, 우리 대통령 첫 실명 비난
	28	- 통일부 대변인 성명 - “북한은 개성공단 관련 당국 간 대화 제의는 거부하면서, 민간단체를 상대로 6·15 공동행사 개최를 제의하는 등 이중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당국 간 대화에 호응해야 함.” - 北 조평통 대변인 담화 - △‘6·15 공동행사 남측 단체 참가 허용’ 요구, △‘공단 입주 기업 방문 시 제품 반출 문제 포함 공단 정상화 문제 협의’ 등 주장 - 통일부 대변인 성명 - “개성공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 임의대로 공단 운영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국제적 규범에 따른 제도적 장치가 보장되어야 함.”
6	5	- 北 적십자중앙위 대변인 담화 - 라오스 탈북 청소년 관련, ‘韓美가 北 청소년들을 유괴·납치하고 있다’며, 사죄 요구

2013년

월	일	주요 일지
6	6	- 北 조평통 대변인 특별담화문 - 개성공단 정상화, 금강산 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 주의 문제 협의 위한 당국 회담 및 6·15·7·4 공동성명 남북 공동 기념행사 등 제의 - 통일부 장관, 남북당국 간 회담 관련 정부 입장 발표 -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 문제 등 남북 간 현안을 해결 하기 위한 「남북장관급회담」을 6.12.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
	7	- 北 조평통 대변인, 조선중앙통신 기자 문담 - 장관급 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을 6.9. 개최할 것을 제의
	7~8	- 美·中 정상회담 -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고 양국 간 협력 강화에 합의
	9~10	「남북당국회담 실무접촉」 개최(판문점 ‘평화의 집’) - 6.12.~13. 「남북당국회담」 개최(서울)에 합의하였으나, 수석대 표의 급(級)과 의제 관련 이견으로 남북은 협의 결과를 발표 문 형식으로 각기 발표
	11	- 北, 우리측 수석대표 격을 문제 삼아 ‘남북당국회담 대표단 파 견 보류’ 통보 - 정부, ‘「남북당국회담」 관련 정부 입장’ 발표 - 수석대표 급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우리 국민들의 상식과 국제적 기준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북한 은 지금이라도 「남북당국회담」에 나올 것”을 촉구
	13	- 北 조평통 대변인 담화 - 「남북당국회담」 무산 책임을 우리 정부에 전가하며, 실무접촉 과정을 일방적으로 왜곡·공개
	16	- 北 국방위원회 대변인, 중대 담화 발표 - 北·美 당국 간 고위급 회담을 제의하면서 의제로 △군사적 긴장 상태 완화,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 △핵 없는 세계 건설 문제 등 제시

2013년		
월	일	주요 일지
6	17	- 美 백악관 NSC 대변인, 북한의 중대 담화 관련 입장 발표 ‘미국은 북한과 신뢰할 수 있는 협상을 원하며, 북한이 유엔(UN) 결의안 및 비핵화를 포함하는 국제 의무를 준수해야만 함. 미국은 북한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판단할 것임.’
	18~22	北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방중, 北·中 전략 대화 개최
	19	- 韓·美·日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워싱턴) - 北 인민보안부 특별담화 - 탈북자들을 내세워 ‘北 존엄과 체제를 중상·모독’을 실시한다고 주장하며, 탈북자들을 물리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 단행’ 위협
	21	- 韓·中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베이징) - 유엔(UN) 주재 북한대사, 기자회견 실시 - 유엔군 사령부 해체 및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등 주장
	27	- 北 조평통 대변인 긴급 성명 -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관련 ‘상대측의 승인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최고 존엄에 대한 우롱이고 도발’이라고 주장 - 韓·中 정상회담,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 채택 ‘핵무기 개발은 동북아에 심각한 위협’, ‘한반도 비핵화가 한·중 공동 이익에 부합’ 등
7	1	-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계기(6.30.~7.2.) 韓·美·日 외교장관 회담 -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는 데 공감대 확인
	2	北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방러, 김성남 당 국제부 부부장 방중
	3	北,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개성공단입주기업협회에 개성공단 관계자들의 공단 방문을 허용하고, 필요한 협의를 하자는 내용의 통지문 전달

2013년

월	일	주요 일지
7	4	• 정부, 「개성공단 남북당국실무회담」 개최 공식 제의 - 시설 점검·완제품 반출 및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문제 등 협의 목적
	6~7	• 「제1차 개성공단 남북당국실무회담」 개최(판문점 ‘통일각’) - △시설·장비 점검, △원자재 및 설비 반출, △신변안전 보장 문제, △후속 회담 일정 등 4개 항에 합의
	10	• 「제2차 개성공단 남북당국실무회담」 개최(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 재발 방지 보장과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방안 집중 논의 • 北, 이산가족 상봉, 「남북적십자실무접촉」 및 「금강산관광재개 실무회담」 제의 - 추석 계기 흠어진 가족·친척 상봉 금강산에서 진행, 이를 위한 「남북적십자실무접촉」 7.19. 금강산 또는 개성 개최 제의 - 금강산 관광 재개 관련 실무접촉을 7.17. 금강산 또는 개성에서 개최 제의 • 우리측, 이산가족 상봉 관련 실무회담 7.19. ‘평화의 집’ 개최 수정 제의 - 금강산 관광 재개 실무회담 제의 관련, 진행 중인 개성공단 정상화 회담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 통보
	10~19	• 개성공단 기업인 등 방북, 개성공단 시설·설비 점검 및 물자 반입 진행
	11	• 北, 이산가족 상봉·금강산 관광 재개 실무회담 보류 통보 • 정부, 금강산 관광·이산가족 상봉 실무회담 관련 정부 입장 발표 - “북측이 순수 인도주의 사안인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적십자실무접촉」에 적극 응해 나올 것 촉구”
	15	• 「제3차 개성공단 남북당국실무회담」 개최(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17	• 「제4차 개성공단 남북당국실무회담」 개최(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18	• 「동아시아컵 축구대회」(7.20.~28., 서울·화성) 참가 북한 여자 선수단 등 총 36명 입국

2013년		
월	일	주요 일지
7	22	• 「제5차 개성공단 남북당국실무회담」 개최(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23	• 北, 장마철 수해 발생 관련 유엔(UN)에 긴급 수해 지원 요청 및 피해 규모 통보
	25	• 「제6차 개성공단 남북당국실무회담」 개최(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 재발 방지 보장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가운데 북한측이 사실상 회담 결렬을 선언
	27	• 정부, 「유엔군 참전·정전 60주년 기념식」(서울, 전쟁기념관) 개최 - 박근혜 대통령,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입각한 대북정책 추진 및 DMZ 평화공원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언급 • 美, 「정전협정 체결 60주년 기념식」(워싱턴, 한국전 참전 기념공원) 개최 - 오바마 대통령, “6·25는 무승부 아닌 한국이 승리한 전쟁”이라고 언급 • 北, 「전승절 60돌 기념행사」 개최 - 軍 열병식, 군중 시위, 전승기념관 개관식, 축포·연회 등 - 同 행사 참석 차 中 리위안차오 국가부주석 방북(7.25.~28.)
	28	• 개성공단 및 인도적 지원 관련 통일부 장관 성명 발표 -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북측의 재발 방지 보장을 촉구하면서 마지막 회담을 제의 - 정치적 문제와는 별개로 북한의 영유아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 추진 의사 표명
	29	• 통일부 장관 명의 대북 전통문 발송 - 「제7차 개성공단 남북당국실무회담」 제의 • 정부, 5개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 승인 - 대상 및 품목 : 북한 영유아, 초등생 대상 의약품, 영양식 등 지원 - 5개 단체 : 민족사랑나눔, 섬김, 푸른나무,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어린이어깨동무

2013년		
월	일	주요 일지
7	29	美 국무부, '카터 前 대통령 방북 및 특사파견 계획이 없다'는 입장 발표
8	3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故 정몽헌 前 회장 10주기 추모식 참석 차 방북(금강산)
	4	- 통일부 대변인 성명 발표 - “북한이 진심으로 기업과 근로자들의 고통을 해소해 주기를 원한다면, 진정 개성공단이 남북관계의 시금석이라 여긴다면, 침묵이 아니라 책임 있는 말과 행동으로 의지를 보여야 함.”
	5	- 정부, 유니세프(UNICEF)의 「북한 영유아 지원 사업」 등에 대한 기금지원 결정(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 △UNICEF(604만 불), △남북 이산가족 영상편지 제작 사업 의결
	7	- 정부, 개성공단 기업들에 대한 경험보험금 지급 결정(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 北 조평통 대변인 특별 담화 - 8.14. 「7차 개성공단 실무회담」 제의 - 통일부 대변인, 조평통 대변인 특별 담화 관련 정부 입장 발표 - 북한이 전향적으로 나온 것으로 평가하며, 북측이 제안한 대로 8.14. 실무회담 수용하며, 개성공단 문제 해결과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
	8	정부, 8.7. 北 제의 회담 수용 전통문 발송
	13	- 정부, 대북지원 민간단체에 대한 모니터링 방북 승인 -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8.14.~17., 평양), △어린이어깨동무(8.14.~17., 남포)
	14	「제7차 개성공단 남북당국실무회담」 개최(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 채택(△재발 방지 및 정상 운영 보장, △신변안전 보장, △국제화 추진, △남북공동위원회 구성, △재가동 적극 노력 등)

2013년		
월	일	주요 일지
8	15	• 박근혜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인도적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임을 밝히고, 추석 전후 남북 이산가족 상봉 및 「DMZ 세계평화 공원」 조성 대북 제안
	16	• 한적, 국제적십자사연맹(IFRC)을 통한 대북 수해 지원 결정(10만 불 상당) • 南, 이산가족 상봉 관련 적십자 실무접촉(8.23., 평화의 집) 개최 제의
	18	• 北 조평통 대변인 담화 - △이산가족 상봉 적십자 실무접촉(8.23.) 장소를 ‘금강산’으로 수정 제의, △10.4. 화상 상봉 제의, △금강산 관광 재개 실무회담을 8.22. 금강산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 • 유엔(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 일행 방한(8.18.~8.27.)
	19	• 정부, 적십자 실무접촉 장소를 판문점 ‘평화의 집’으로 재차 제의 - 금강산 관광 관련 실무회담에 대해서는 검토 후 입장을 밝힐 것임을 통지 • 南北,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 관련 협의(판문점 연락관 채널)
	20	• 北,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금강산 관광 문제와 연계하면서, 실무접촉 장소를 ‘금강산’으로 재차 제의 • 北 조평통 대변인 담화 - 2013 UFG 관련 최초 공식 비난 • 南, 적십자 실무접촉은 금강산 문제와 별개의 사안이라는 입장에서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8.23. 개최 거듭 제의 - 「금강산관광실무회담」은 9.25. ‘금강산’ 개최 입장을 전달
	21	• 「2013 광주 국제 리더십 프로그램(YLP)」 참가 북한 청소년 4명 방한(8.21.~9.4.)
	22	• 北, 적십자 실무접촉 8.23. 판문점 ‘평화의 집’ 개최 수용 - 금강산 관광 관련 회담은 8월 말~9월 초 ‘금강산’ 개최 제안

2013년

월	일	주요 일지
8	22	• 南, 「금강산관광실무회담」 일정 관련 검토 후 통보 입장 전달
	23	• 「남북적십자실무접촉」 개최(판문점 ‘평화의 집’) -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9.25.~30.) 및 화상 상봉(10.22.~23.) 합의 - 11월 안에 상봉 행사를 한 차례 더 진행하는 데 공감하고, 상봉 직후 적십자 실무접촉 개최 합의 -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생사 확인, 서신 교환 등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 위해 계속 노력하기로 합의
	26	• 中 우다웨이 6자회담 수석대표(한반도사무특별대표) 일행 방북 (8.26.~8.30.)
	27	• 南, 「금강산관광실무회담」 일정 수정 제의(9.25.→10.2.)
	28	• 北, 「금강산관광실무회담」 관련 우리측 수정 제의 일정에 대해 유감 표명 • 南, 「금강산관광실무회담」 관련 우리측 제의 실무회담 일자 (10.2.) 재검토 제의
	28~29	• 이산가족 상봉 행사 관련 금강산 시설 점검 실시
	29	•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 채택 - △상설 사무처·분과위 설치 △공동위 제1차 회의는 9.2. 개성공단 개최 등 합의
		• 이산가족 상봉 관련, 남북 ‘생사확인 의뢰서’(南 250명, 北 200명) 교환
		• 남북 오토바이 종단 뉴질랜드인 5명, 군사분계선을 넘어 입국
		• 北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 담화 - UFG 기간 B-52H 폭격기 출격을 “로골적인 핵공갈” 등으로 비난 -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미국의 핵위협 중지 필요 - 진정한 평화와 긴장 완화를 위한 건설적이고 과감한 평화적 조치들 검토 중 언급
	30	• 北, 북한에 억류 중인 미국인(케네스 裒)의 석방을 위한 로버트 킹 美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초청 철회

2013년		
월	일	주요 일지
9	2	•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1차 회의」 개최 - 공동위 산하 분과위(9.4.~5.) 및 공동위 2차 회의(9.10.) 일정 합의 - 상설 사무처 구성·운영 및 기업 피해 보상 문제 등 협의 • 정부, 북한 취약 계층 대상 의약품·영양식 등을 지원하는 국내 12개 민간단체 반출 승인 및 WHO 「북한 영유아 지원 사업」(630만 불) 기금 지원 계획 발표
	3	• 南 이산가족 상봉 행사 협의안 통보(남북연락관 채널) - 이산가족 숙소로 외금강호텔·금강산호텔 사용 입장 등
	4	• 北 통지문 - 금강산 관광 예약으로 외금강호텔·금강산호텔을 이용할 수 없다며 해금강호텔·현대생활관을 사용할 것을 제의
	4	•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투자보호 및 관리운영 분과위원회」, 「국제경쟁력 분과위원회」 1차 회의 개최 - △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 문제, △공동 투자설명회, △우수 해외공단 시찰 문제 등 논의
	5	• 南 통지문 - 안전성·수용 규모 등을 고려할 때, 2009년·2010년 상봉행사 시 숙소로 사용한 외금강호텔과 금강산호텔을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강조 • 개성공단 「출입·체류 분과위원회」, 「통행·통신·통관 분과위원회」 1차 회의 개최 - △출입·체류 상 신변안전 보장 방안 등 논의, △서해 군 통신선 9.6. 재개 합의, △3통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 방향에 대한 공감대 형성
	6	• 南北, 서해지구 군 통신선 복구
	10	• 「2013년 아시아클럽 역도 선수권 대회(9.12.~17., 평양)」 우리 선수단 41명 방북

2013년

월	일	주요 일지
9	10~11	•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2차 회의」 개최 - △공동위 산하 분과위(9.13.) 및 3차 공동위 개최(9.16.), △9월 중 공동위 사무처 가동, △「개성공단에서의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이행을 위한 부속합의서」 채택, △9.16.부터 개성공단 재가동, △금년 중 1일 단위 상시 통행, 인터넷·이동전화 통신 연내 개통을 위한 협의 지속, △10월 중 외국 기업 대상 투자 설명회, △2013년도 기업 세금 면제 등에 합의
	13	• 南北, 이산가족 상봉 후보자들의 생사확인 회보서 교환 • 개성공단 「출입·체류 분과위원회」, 「통행·통신·통관 분과위원회」 2차 회의 개최
	16	•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3차 회의」 개최 - △공동위 사무처 개소를 위한 실무협의 9.24. 개최, △공동 투자설명회 10.31. 개성 개최 합의 • 개성공단, 재가동 시작 • 이산가족 상봉 최종 명단(南 96명, 北 100명) 교환
	18	• 6자회담 10주년/9·19 공동성명 8주년 기념 1.5트랙 세미나(베이징) - 북한은 중국과의 공조 체제 구축 노력 및 전제 조건 없는 6자회담 재개 주장 - 미국은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 재확인
	20	• 이산가족 상봉 행사 선발대 방북
	21	• 北 조평통 대변인 성명, 이산가족 상봉 행사 일방 연기 발표 - “대화와 협상이 진행될 수 있는 정상적인 분위기가 마련될 때까지 이산가족 상봉 연기 및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회담 연기” 주장

2013년		
월	일	주요 일지
9	21	• 통일부 대변인 성명 -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불과 4일 앞두고 일방적으로 연기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조속히 응할 것을 촉구 • 北·露, 나진-하산 철도 개보수 구간 개통식(나진항) - 전길수 북한 철도상, 알렉산드르 티모닌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 등 참석 • 北 조평통 서기국 보도, 9.21. 통일부 대변인 성명 비난 - “남북관계 차단하려는 반민족적 기도”
	24	•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사무처 개소 관련 남북 간 실무협의(개성) - 9.30. 개소식 진행 및 9.26. 「출입·체류 분과위원회」 및 「통행·통신·통관 분과위원회」 3차 회의 개최 등에 합의
	25	• 北 서해지구 군사 실무 책임자, 「3차 통행·통신·통관 분과위원회」 연기 통보
	26	• 「개성공단 출입·체류 분과위원회 3차 회의」 개최 - 신변안전 문제와 법 위반 시 조사 절차, 합의서 적용 범위 등 출입·체류 부속합의서 문안 등 협의 • UN 고위급회의의 北 대표단장 연설 - “전제 조건 없는 대화 통해 한반도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촉구
	26~27	• UN 총회 계기 美·中(9.26.), 韓·美, 韓·中(9.27.) 외교장관 회담 - 美·中 외교장관 회담에서 양국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대북 제재 유지 등 일관된 대북정책 공조 재확인
	30	•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 개소 - 개성공단 공동위 사무처장 실무협의(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10	1	• 박근혜 대통령, 국군의 날 기념사 - “북한이 핵을 내려놓고 북한 주민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올바른 선택을 할 때까지 강력한 대북 억지력을 구축해야 함.”

2013년

월	일	주요 일지
10	1	- 北 박길연 외무성 부상, 유엔(UN) 총회 연설 - 美 대북정책 비난 및 핵군축회담을 통한 '핵 없는 세계' 건설 주장
	1~2	- 北·美 트랙2 회의 개최(런던) - 北 리용호 외무성 부상과 美 스티븐 보즈워스 前 대북정책 특별대표 등 참석, 6자회담 재개 방안 등 논의
	4	- 北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 성명 - 경제·핵 병진 노선의 지속 추진을 선언하면서 국군의 날 기념사 등을 소재로 박근혜 대통령 발언 비난 등 비방·중상 재개
	4	- 통일부 대변인 성명 - 북한의 비방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상호 존중에 입각한 품격 있는 언행 촉구
	5	- 北 조평통 대변인 담화, 10.4. 통일부 대변인 성명 반박 - “상대방의 최고 존엄과 체제를 부정하고 중상·모독하면서 대결을 조장·격화시키는 것이 예의·품격 있는 언행이며 상호주의 정신인가” - “핵 문제 해결 위해 미국의 핵위협 제거 필요”
	7	- APEC(발리) 계기 韓·中 정상회담 - 양측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고 북핵 공조를 강화하기로 합의 - 박근혜 대통령,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경제 발전에 집중할 수 있도록 韓·中 양국이 협력하여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 시진핑 中 국가주석, “북한의 핵보유 및 추가적인 핵실험을 결연히 반대”, “안보리 대북 제재 준수 및 북핵 문제 악순환을 막아야 한다.”고 언급 - 北 조평통 대변인 담화 - “韓·美가 미 핵항공모함까지 끌어들이고 북침 핵전쟁 도발 기도를 드러내면서 북핵 포기를 말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비난

2013년		
월	일	주요 일지
10	7	• 통일부 대변인 - 최근 북한의 원색적인 비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북한이 비방·중상을 중단하고 남북관계에 성의 있는 자세로 나올 것을 촉구
	8	• 北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담화 - 韓·美 간의 ‘맞춤형 억제전략’, 합동 해상훈련 등을 비난하며, ‘모든 군부대에 동원태세 긴급 지시 하달’ 등 대남 위협 - “한반도 비핵화 위해 北이 아닌 美의 先 조치 필요” • 통일부 대변인 성명 - 대통령에 대한 북한의 비방·중상 중단을 촉구하고 자극적 언행이 북한의 고립을 자초한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 - “북한에게 1명의 존엄이 있다면, 대한민국에는 5천만의 존엄이 있음. 개개인이 모두 존엄인 우리 국민을 위협하고, 국민이 뽑은 대통령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를 해서는 안 됨.”
	9	• ASEAN+3/EAS 계기 한·미얀마 정상회담 - 박근혜 대통령, “북한이 미얀마의 개혁·개방 정책을 본받아 진정한 변화와 평화의 길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 • 北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 - (우리 정부의 대남 비방 중단 요구 관련) 北 최고 존엄·체제 비난 먼저 중지할 것 주장 • 韓·美 해상훈련 관련 北 외무성 대변인 담화 - “한반도 긴장 격화 장본인은 미국”, “평화를 구걸하지 않으며,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되어 있다.”
	10	• 북한에 억류 중인 케네스 켈 모친 방북 - 평양친선병원에서 케네스 켈 면회 • 北 조평통 대변인 담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관련 비난 - ‘최고 존엄과 관련된 문제’라고 주장 - 대화록 공개 시, 우리측 위성자들의 방북 시 발언 공개 위협

2013년

월	일	주요 일지
10	11	• 정부, 개성공단 공동 투자설명회 연기 요청(당초 10.31. 예정) - 3통 문제 협의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외국 기업의 반응을 고려할 때 10.31.로 예정되었던 개성공단 국제화를 위한 공동 투자설명회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입장을 북측에 전달
	12	• 조계중 관계자 20명 방북, 「신계사 낙성 6주년 기념 남북합동 법회」 개최
	14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부에 개성공단 현장 방문 공식 요청 • 신선호 유엔 주재 북한대사, 유엔총회 제1위원회 기조연설 -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북한 체제안전 보장 요구
	15	• 北, 개성공단 공동 투자설명회와 관련 연기 동의 - “지금과 같은 때에 투자설명회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언급
	16	• 정부, 외교통일위원회의 개성공단 방문 입장을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를 통해 북측에 전달
	17	• 정부, 대북 인도지원 모니터링을 위한 민간단체 방북 승인 - 나눔인태내셔널(10.19.~22.), 남북평화재단(10.19.~23.), 남북함께살기운동(10.23.~26.) 등 3개 단체, 총 12명 방북 승인
	18	• 박근혜 대통령 「유라시아 컨퍼런스」 기조연설 - 유라시아를 ‘하나의 대륙’, ‘창조의 대륙’, ‘평화의 대륙’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제안
	23	• 北 외무성 대변인 담화 - ‘일방적인 先 핵포기’가 아닌 ‘동시 행동으로 쏘 한반도를 비핵화하는 것이 정책 목표’라며, ‘핵위협 가중 시 핵억제력 강화’ 주장 •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부속 합의서」 체결 - △업무 시간, △남북 간 정례회의 및 업무 협의 계획, △남북 사무처 인원들의 통행·통신 방법, △업무 협조 체계

2013년		
월	일	주요 일지
10	24	- 北,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를 통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개성공단 현장 방문 수용 입장 전달 - 北 통지문 - ‘불법 입국하였다가 단속된 우리측 인원 6명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돌려보내겠다’는 입장을 통보 - 南 통지문 - 우리측은 ‘북측이 그동안 신원 확인 요청에 대해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늦었지만 이들을 돌려보내겠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 전달
	25	관문점을 통해 북한에 억류되어 있던 우리 국민 6명과 유해 1구 인수
	26	우리 해군·해경, 기관 고장으로 동해상에 표류하던 북한 어선 1척(북한 주민 4명 승선)을 구조해 10.27. 북한측에 인계
	30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개성공단 현장 방문 - 외통위 위원 21명, 기자단 10명, 지원 인력 등 총 47명 - △공단 현황 브리핑 청취, △개성공단관리위원회 방문, △입주 기업 방문 및 오찬 간담회, △정배수장·소방서·변전소 등 주요 시설 시찰
11	2	- 박근혜 대통령, 佛 르피가로지 인터뷰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입각한 정책 추진 입장 강조 - 「남북정상회담」이 “남북평화와 남북관계 발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것에 대해 열려 있음.” - “개성공단은 남북 간 경제협력에서 중요할 뿐 아니라 상호 신뢰의 주춧돌 같은 역할을 함. 우리 정부는 단순한 재가동뿐 아니라 공단의 정상화에 특별한 중요성을 두었음.”
	4	- 韓·佛 정상회담 공동 언론발표문 - 박근혜 대통령, 북한의 비핵화가 한반도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필수적이며,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점을 강조

2013년

월	일	주요 일지
11	6	• 韓·英 정상회담 공동성명 - 박근혜 대통령, 북한이 유엔(UN) 안보리 결의 및 9·19 공동성명을 준수하고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며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성원이 될 것을 촉구 • 우리측, 개성공단 남북공동위 사무처를 통해 북측에 개성공단 분과위원회 개최 제의
	7	• 천태종 장영덕 총무원장 등 21명 개성 방북 - 「영통사 낙성 8주년 및 대각국사 의천 912주기 열반 다례재 남북합동법회」 개최 • 北 국가안전보위부 보도 - ‘제3국을 통해 밀입국한 남한 정보원 첩자’ 체포 조사 중이라고 주장
	8	• 개성공단 남북공동위 산하 3개 분과위원회 개최(11.13.~14.) 합의
	9~13	• 평화3000 박창일 신부 등 12명 방북 - 「평양 장충성당 설립 25주년 미사」 봉헌
	11	• 北 조평통 대변인, 박근혜 대통령 유럽 순방 기간 대북 발언(정상회담, 핵 폐기, 인권 등) 관련 비난 - “정상회담 발언은 위선, 북과 끝까지 대결하려는 흥심만 들어차 있다”
	13	• 韓·露 정상회담 개최 - △나진-하산 물류 사업, 조선·북극 협력 등 실질적 협력 강화 방안, △북핵 불용 및 핵보유국 지위 불인정 입장 재확인, △푸틴 대통령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지지 입장 표명, △양국 간 인적·문화 교류 증진 방안,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등에 대해 논의하고 35개 항의 공동성명을 채택

2013년		
월	일	주요 일지
11	13	• 개성공단 「투자보호 및 관리운영 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개성) - 상사중재위원회 구성 문제와 개성공단 관리운영 문제에 대해 논의, 12월 초 상사중재위원회 명단을 상호 교환하고 중재위원회 구성 이후 중재 규정 논의 등을 진전시켜 가자는 데 합의 • 개성공단 「국제경쟁력 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 투자설명회·해외 공동시찰 등 개성공단 국제화를 위한 협의 진행, 우리측은 개성공단의 국제화를 실질적으로 진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3통 분과위를 조속히 개최해야 함을 강조
	14	• 개성공단 「출입·체류 분과위원회 제4차 회의」 개최 - 위법행위 발생 시 입회 조사, 조사 과정에서의 기본권 보장 등이 포함된 출입·체류에 관한 부속합의서 초안에 대해 협의
	15	• 北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 담화 - 박근혜 대통령의 서유럽 순방 시 대북 발언 관련, “핵 포기는 제국주의의 노예가 되라는 것”라며 “핵·경제 병진 노선에 대해 재갈거리지 말고, 국가원수로 대접받으려면 똑바로 처신하라.”고 비방 • 통일부 대변인, 북한이 백해무익한 비방을 중단하고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 것을 촉구 - “북측이 사용한 저속한 표현들이 북측의 지도자에게 그대로 사용된다면 자신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를 생각해 보길 바란다.”고 강력 대응
	18	• 박근혜 대통령 2014년 예산안 시정 연설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입각한 남북관계 발전 및 임기 중 평화통일 기반 구축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임을 강조
	19	• 유엔(UN) 인권위원회, ‘북한 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채택 - △북한 내 정치범의 조건 없는 즉각 석방, △강제 복송된 탈북민 처우 개선, △인권 상황 공개 촉구 등

2013년

월	일	주요 일지
11	20	- 北 조국전선 중앙위원회 호소문 “남조선의 모든 진보·민주세력들은 연대·연합해 유신 독재 부활을 배격하자.”고 반정부 투쟁 선동
	21	- 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 발표 △평북 신의주에 특수경제지대, △각 도에 경제개발구 내오기로 결정
	22	- 北 인민군 서남전선사령부 대변인 담화 “무모한 도발이 재연된다면 연평도 불바다가 청와대 불바다로, 통일 대전의 불바다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위협 - 통일부 대변인 성명 - 북한이 우리 사회 내부 갈등과 혼란을 조장하려는 데 대해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북한의 우리 인원 체포 주장과 관련, ‘우리 국민의 신원 확인’ 요구에 대해 조속히 응할 것을 촉구 - 남북역사학자협의회 기광서 기획총괄위원장 등 9명 개성 방문 -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 발굴조사 사업 협의
	25~26	- 우리측,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의 신원 확인 및 조속한 석방을 요구하는 대북 통지문을 전달 - 북한측, 수령 거부
	26	정부,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구조(11.22.)된 북한 선원 1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측에 송환
	29	- 개성공단 「통행·통신·통관 분과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 △1일 단위 상시 통행을 실시하기 위한 RFID 공사 개시, △통관 편의 제고를 위한 현장 방문 실시, △인터넷 연결 등을 위한 통신 분야 실무접촉, △군 통신 분야 실무접촉 개최 합의
12	3	- 우리측, ‘우리 국민 신원 확인 및 석방, 송환 요구에 조속히 응할 것을 촉구’하는 대북 구두 통지(판문점 연락관) - 북한측, 접수 거부

2013년		
월	일	주요 일지
12	6	• 정부, 나눔인터내셔널·한국카리타스·섬김 등 3개 단체의 北 탁아소, 유치원 등 영유아 및 환자 대상 의약품·빵 재료 등 11.7억 원 상당 대북지원 반출 승인 • 박근혜 대통령, 조셉 바이든(Joseph Biden) 美 부통령 접견, -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韓·美 양국이 더욱 노력해 나가기로 함. • 「개성공단 통신 분야 및 군 통신 분야 실무협약」 개최(종합지원센터) - △통신 분야 실무협약에서는 인터넷 연결 방식 등에 대해 토의, △군 통신 분야 실무협약에서는 개성공단의 안정적 통행 보장을 위한 북측의 자재·장비 제공 요청 등 청취
	7	• 北, ‘반공화국 적대 행위’를 이유로 단속·억류하고 있던 미국인 메릴 뉴먼(Merrill Newman)을 42일 만에 석방
	8	• 北, 「노동당 중앙위 정치국 확대회의」 - 장성택을 ‘반당·반혁명 종파분자’로 출당·제명(12.9. 중통 등 보도) - 주요 죄목 : △종파·반혁명 행위, 최고사령관 명령 불복, △사법·보안기관의 당적 지도 약화, △경제지도기관(내각)의 역할 무력화, △마약, 여자관계, 외화 탕진, 도박 행각 등
	11	• 개성공단 전자출입체계(RFID) 공사 시작 • 南, 개성공단 상사중재위원회 우리측 위원 명단(5명) 대북 통보
	12	• 北,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 - 장성택 죄목을 ‘국가전복음모죄’로 규정, 형법 제60조에 따라 사형 판결 및 즉시 집행 보도(12.13. 중통 보도) - 주요 죄목 : △김정은 후계자 계승 문제를 방해, △중요 경제 부문들을 건어줘서 내각을 무력화, △군대 동원하여 정변을 일으키려고 시도 등

2013년

월	일	주요 일지
12	12	- 北, 「개성공단 남북공동위 제4차 회의」 12.19. 개최 제의 - 「G20 서울 컨퍼런스」 대표단 30여 명의 개성공단 방문 계획 (12.19.) 수용
	13	- 우리측, 북한의 「개성공단 남북공동위 제4차 회의」 12.19. 개최 제의에 동의 - 통일부 대변인 성명 - 장성택 처형 관련 “정부는 최근 북한 내 전개되고 있는 사태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여 차분한 가운데 만전을 기해 나갈 것임.”을 발표
	16	- 박근혜 대통령 주재 외교안보장관회의 개최 - 장성택 숙청 등 북한 내부 정세 변화와 관련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는 것을 강조
	17	정부, 국제사랑재단·어린이어깨동무 등 2개 단체의 북한 어린이 대상 분유·이유식·기초 의약품 등 8.5억 원 상당 인도적 지원 승인
	19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제4차 회의」 개최(종합지원센터) -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와 재가동 이후 남북 간 합의 이행 상황 점검 - △RFID 공사 및 1일 단위 상시 통행, 인터넷 서비스 등 3통 문제, △출입·체류 부속합의서 채택 문제, △노무·임금 등 관리운영 문제 등에 대해 협의, △공동 투자설명회 2014년 1월 말 개최 제안 「G20 서울 컨퍼런스」(12.18.~19, 서울) 계기, G20 및 국제금융기구 대표단 일행 개성공단 방문
	24	- 정부, 어린이재단·남북평화재단 등 2개 단체의 북한 취약 계층 대상 영양식 재료 등 21억 원 상당의 인도적 지원 승인 - 박근혜 대통령, 최근 북한 내부 동향 관련 철저한 안보 태세 구축 강조

2013년		
월	일	주요 일지
12	25	- 北 조평통 서기국 공개질문장 - 우리 대통령을 실명 비난하고, 남북관계 악화 책임을 우리 정부에 전가하며, “평화와 통일, 대결과 전쟁 중에 ‘최후의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
	26	- 통일부 부대변인 명의 北 조평통 서기국 공개질문장에 대한 정부 입장 발표 - “공개질문장은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조차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일일이 답변할 가치가 없음.” - “북 내부 혼란 무마용 의심” - “신뢰인지 대결인지의 문제는 북한의 태도에 달려 있음.” - 北, 개성공단 상사중재위원회 북측 위원 명단(5명) 통보
	30	정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민족사랑나눔 등 2개 단체의 북한 영유아·결핵환자 대상 영양빵 재료·이유식·결핵약 등 2.4억 원 상당의 인도적 지원 승인

2. 남북회담 합의서

□ 남북 경제 분야 회담

- 개성공단 남북 당국 실무회담 합의서(2013.7.7.)
-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2013.8.14.)
-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2013.8.28.)
-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제2차 회의 공동발표문 (2013.9.11.)
-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2013.9.11.)
- 개성공단에서의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이행을 위한 부속합의서 (2013.9.11.)
-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부속합의서 (2013.10.23.)

□ 남북 인도 분야 회담

- 남북적십자실무접촉 합의서(2013.8.23.)

□ 남북 경제 분야 회담

개성공단 남북 당국 실무회담 합의서

남과 북은 2013년 7월 6일부터 7월 7일까지 판문점 통일각에서 개성공단 남북 당국 실무회담을 진행하였다.

남과 북은 개성공단 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개성공단을 발전적으로 정상화해 나간다는 데 인식을 공유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장마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남측 기업 관계자들을 비롯한 해당 인원들이 7월 10일부터 개성공단을 방문하여 설비 점검 및 정비를 진행하도록 한다.
2. 남과 북은 남측 기업들이 완제품 및 원·부자재를 반출할 수 있도록 하며, 관련 절차에 따라 설비를 반출할 수 있도록 한다.
3. 남과 북은 설비 점검과 물자 반출 등을 위해 개성공단에 출입하는 남측 인원들과 차량들의 통행·통신과 남측 인원들의 안전한 복귀 및 신변안전을 보장한다.
4. 남과 북은 준비되는데 따라 개성공단 기업들이 재가동하도록 하며 가동 중단 재발 방지 등 개성공단을 정상화하기 위해 7월 10일 개성공단에서 후속 회담을 개최한다.

2013년 7월 7일

개성공단 남북 당국 실무회담
남측 대표단
수석대표 서호

개성공단 북남 당국 실무회담
북측 대표단
단장 박철수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

남과 북은 2013년 7월 6일부터 8월 14일까지 개성공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7차례의 당국 실무회담을 진행하고,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통행 제한 및 근로자 철수 등에 의한 개성공단 중단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남측 인원의 안정적 통행, 북측 근로자의 정상 출근, 기업재산의 보호 등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

또한, 남과 북은 이번 공단 가동 중단으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 보상 및 관련 문제를 앞으로 구성될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한다.

2. 남과 북은 개성공단을 왕래하는 남측 인원들의 신변안전을 보장하고, 기업들의 투자자산을 보호하며, 통행·통신·통관 문제를 해결한다.

① 남과 북은 개성공단을 왕래하는 남측 인원들의 안전한 출입과 체류를 보장한다.

② 남과 북은 개성공단에 투자하는 남측 기업들의 투자자산을 보호하고, 위법행위 발생시 공동조사, 손해배상 등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③ 남과 북은 통행·통신·통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면하여 상시적 통행 보장, 인터넷 통신과 이동전화 통신 공급, 통관 절차 간소화와 통관 시간 단축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한 실무적 문제들은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한다.

3. 남과 북은 개성공단 기업들에 대해 국제적 수준의 기업활동조건을 보장하고,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공단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① 남과 북은 외국 기업들의 유치를 적극적으로 장려한다.

② 남과 북은 개성공단 내에서 적용되는 노무·세무·임금·보험 등 관련 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③ 남과 북은 생산제품의 제3국 수출 시 특혜관세 인정 등 개성공단을 국제경쟁력이 있는 공단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들을 강구한다.

④ 남과 북은 공동 해외 투자설명회를 추진하기로 한다.

4. 남과 북은 상기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산하에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둔다.

이를 위하여 남과 북은 빠른 시일 안에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고, 해당 기구들의 활동을 개시한다.

5. 남과 북은 안전한 출입 및 체류, 투자자산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개성공단 기업들이 설비정비를 하고 재가동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2013년 8월 14일

상 부 의 위 임 에 따 라
개성공단 남북 당국 실무회담
남 측 수석대표 김기웅

상 부 의 위 임 에 따 라
개성공업지구 북남 당국 실무회담
북 측 단 장 박철수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은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의 이행을 위하여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고 한다.)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제1조 공동위원회 구성

- ① 공동위원회는 남과 북이 각각 위원장 1명, 위원 5명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② 쌍방의 위원장은 국장급으로 하며, 위원들은 편리한 대로 한다.
- ③ 쌍방은 위원장과 위원들을 교체할 경우, 사전에 상대측에 통보한다.

제2조 공동위원회 기능

- ① 개성공단과 관련한 남북사이의 합의사항들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총괄하고, 산하 분과위원회들의 활동을 종합적으로 조정한다.
- ② 개성공단 운영과 관련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며 당국간에 해결해야 할 현안 문제들과 쌍방이 제기하는 문제들을 협의·해결한다.

제3조 공동위원회 운영

- ① 공동위원회는 분기에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② 공동위원회는 쌍방 위원장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 ③ 공동위원회는 쌍방 합의에 따라 필요한 경우, 기업인, 근로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공동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그 밖의 사항들은 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쌍방은 공동위원회 산하에 「출입·체류 분과위원회」, 「투자보호 및 관리운영 분과위원회」, 「통행·통신·통관 분과위원회」, 「국제경쟁력 분과위원회」를 두며,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분과위원회를 추가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과 3~4명의 인원으로 구성하고, 분과위원장의 급은 과장급 이상으로 하며, 쌍방이 합의하는데 따라 인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기능

「출입·체류 분과위원회」는 개성공단을 왕래하는 인원 및 수송수단의 출입과 체류의 편의, 신변안전 보장과 관련해 제기되는 문제들을 협의·해결한다.

「투자보호 및 관리운영 분과위원회」는 투자자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법행위 발생시 공동조사, 손해배상 등 상사분쟁 문제들과 노무·세무·임금·보험·환경보호를 비롯하여 개성공단의 관리운영을 국제적 기준에 맞게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문제들을 협의·해결한다.

「통행·통신·통관 분과위원회」는 개성공단의 통행·통신·통관을 원활히하기 위한 문제들을 협의·해결한다.

「국제경쟁력 분과위원회」는 외국기업의 유치, 해외 공동 투자설명회 개최, 개성공단 제품의 제3국 수출시 특혜관세 인정 등 개성공단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문제들을 협의·해결한다.

④ 각 분과위원회는 월에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5조 상설 사무처 구성 및 운영

① 남과 북은 공동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이하 “사무처” 라고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사무처는 쌍방 당국에서 각기 파견하는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수의 인원들로 구성한다.

③ 사무처는 공동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를 지원하고, 개성공단 운영과 관련한 남북 당국간 연락 업무와 그 밖에 공동위원회가 위임한 업무를 처리한다.

④ 쌍방은 사무처 인원들의 활동 보장과 운영 등에 관한 합의를서를 별도로 체결한다.

제6조 발효 절차

공동위원회, 각 분과위원회의 합의사항은 쌍방 공동위원회 위원장이 각기 합의서에 서명한 날부터 또는 필요한 경우 서명 후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7조 수정·보충

이 합의서는 쌍방이 합의하여 수정·보충할 수 있다.

2013년 8월 28일

개성공단 남북 당국 실무회담
남 측 수석 대표 김 기 응

개성공업지구 북남 당국 실무회담
북 측 단 장 박 철 수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제2차 회의 공동발표문

남과 북은 2013년 9월 10일부터 11일까지 개성공단에서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가지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였으며,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를 9월 중에 가동 시키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결과를 평가하고, 상호 관심사들을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 ① 남과 북은 「개성공단에서의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이행을 위한 부속합의서」를 체결하였다.
 - ② 통행·통신·통관 분과위원회에서는 금년안에 전자출입체계(RFID)에 의한 출입체계를 도입하여 일일단위 상시통행을 실시하며, 인터넷과 이동전화 통신 제공을 위한 실무적 문제들을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전자출입체계(RFID) 도입 전까지 당일 출입계획자의 당일 통행 보장 문제는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계속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
 - ③ 국제경쟁력 분과위원회에서는 외국기업 유치를 위하여 우선 남측 지역의 외국 기업과 외국 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설명회를 10월 중 개성공단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 ④ 출입·체류 분과위원회에서는 기업인들의 신변안전과 안전한 출입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선문제, 위법행위 발생시 입회조사 등과 관련한 부속 합의서 초안을 교환하였으며, 앞으로 계속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기업들의 피해 보상 및 관련 문제를 협의하고 기업들이 개성공단에서 납부하는 2013년 세금을 면제하고, 올해 4월부터 발생한 북측 근로자들의 임금 정산은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가 협의하여 처리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9월 16일부터 기업들이 시운전을 거쳐 재가동에 들어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분과위원회 회의들을 9월 13일에, 남북공동위원회 제3차 회의는 9월 16일에 개최하기로 하였다.

2013년 9월 11일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은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이하 “사무처”라고 한다)를 구성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명칭 및 위치

- ① 사무처 명칭은 남측은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남측 사무처’라고 하고, 북측은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북측 사무처’라고 한다.
- ② 사무처는 개성공단 내에 설치한다.

제2조 구성

- ① 사무처는 쌍방 당국에서 각기 파견하는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수의 인원들로 구성한다.
- ② 쌍방은 사무처 구성 명단을 사무처 개소 3일전에 상대방측에 통보한다. 사무처 인원을 교체할 경우 7일전에 상대방측에 통보한다.

제3조 기능

- ① 사무처는 공동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을 지원한다.
- ② 사무처는 개성공단 운영과 관련한 남북 당국간 연락 업무를 담당한다.
- ③ 그 밖에 공동위원회가 위임한 업무를 처리한다.

제4조 운영 및 관리

- ① 쌍방은 전화, 팩스, 사무처 인원 사이의 접촉 등을 통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 ② 사무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며, 쌍방이 합의 하여 날짜와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③ 일요일은 휴무일로 하며 쌍방이 각기 제정한 공휴일은 일방의 통지에 따라 휴무일로 한다.
- ④ 사무처 운영과 관련한 그 밖의 구체적인 사항은 쌍방 사무처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 사무처의 활동 보장

- ① 남과 북은 사무처 인원들의 통행, 통신, 신변안전, 행낭과 휴대폰 반출입 등을 당국간 회담 대표단의 수준에서 보장한다.
- ② 남과 북은 사무처 운영과 관련한 물자 및 설비의 반출입과 차량 운행을 보장하며, 이에 대한 세금과 부과금을 면제한다.
- ③ 쌍방 사무실은 각측 사무처장의 동의하에 출입한다.
- ④ 이 밖에 제기되는 문제들은 쌍방이 협의하여 풀어나간다.

제6조 효력 발생

이 합의서는 쌍방 공동위원회 위원장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7조 수정·보충

이 합의서는 쌍방이 협의하여 수정·보충할 수 있다.

2013년 9월 11일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남측 위원장 김기웅

개성공업지구 북남공동위원회
북측 위원장 박철수

개성공단에서의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이행을 위한 부속합의서

남과 북은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따른 남북상사중재위원회가 가동되기 이전까지 개성공단과 관련한 상사분쟁을 신속,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개성공단 상사중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하기로 하였다.

1. 위원회는 개성공단 내에서 발생하는 상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구이다. 위원회는 남과 북에서 독자적인 법인으로서의 능력을 가진다.
2. 위원회는 남북 각각 위원장 1인, 위원 4명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위원장과 위원은 법률 및 국제무역 투자 실무와 개성공단 및 기타 필요한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한다.
3.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연락 및 지원업무 등은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가 담당한다.
4. 본 합의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중 투자자산 보호와 관련한 부분은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상사분쟁 해결절차와 관련한 부분은 「남북 사이의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상사중재 위원회와 관련한 부분은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준용한다.
5. 남과 북은 이 합의서의 발효된 날부터 3개월 내에 위원회를 구성하며, 6개월내에 중재인 명부를 교환하고, 당사자들의 투자 및 경제활동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중재규정을 마련한다.
6. 이 합의서는 쌍방이 합의하여 수정·보충할 수 있다.
7. 이 합의서는 쌍방 공동위원회 위원장이 서명한 후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13년 9월 11일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남측 위원장 김기웅

개성공단 북남공동위원회
북측 위원장 박철수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부속합의서

남과 북은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이하 ‘사무처’라고 한다)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운영

1. 쌍방의 사무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를 근무일로 하며 각자의 필요에 따라 운영시간 외에도 근무할 수 있다.
2. 쌍방은 긴급한 문제처리에 필요한 연락체계를 개설·유지한다.
3. 사무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쌍방 사무처장회의를 매주 목요일 오후 3시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사무처장회의에서는 사무처 운영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협의하고 다음 주에 예정된 주간 일정을 교환하며, 매월 마지막 주 회의에서는 다음달 예정된 일정을 교환한다.
4. 쌍방은 매일 9시 30분에 정기 협의에서 일일 업무계획을 교환하고, 필요한 사항을 협의한다.

제2조 통행·통신

1. 쌍방 사무처 인원이 상대측 지역으로 출입하는 경우, 상대측에게 입출경 24시간 전에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긴급업무, 구급환자 발생 등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사무처 인원들은 쌍방 사무처가 발급한 출입증을 남북간 통행 시와 개성공단 내에서의 신원 확인에 이용하며 관련기관은 이에 따르는 편의를 보장한다.

출입증 발급 또는 재발급시 해당 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에 등록하며, 관련 양식은 붙임과 같다.

3. 쌍방은 원활한 연락을 위해 사무처간 직통전화와 개성공단 구내전화를 보장·이용한다.
4. 쌍방은 남측 사무처와 남측 지역 사이의 직통전화 3회선을 보장·이용하고, 남북 당국간 회담 시에는 상호 협의하여 필요한 회선을 보장한다.

제3조 업무협조

1. 쌍방은 사무처에 출입하는 상대측 인원들과 차량에 대한 편의를 최대한 보장한다.
2. 쌍방은 긴급업무와 구급환자 발생 등 긴급한 상황시에는 상대 측에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한다.
3. 쌍방은 사무처 내 보건 및 위생, 화재방지를 위해 상호 협력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4조 사무실 및 설비의 관리

1. 쌍방 사무처의 사무실과 설비 등의 관리는 사용하는 측이 하며, 회담장, 회의실 등은 공동으로 관리한다.

2. 쌍방은 사무처의 사무실 구조 변경, 장식물 설치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3. 쌍방 사무처의 비품, 자재 및 설비의 유지, 보수는 각기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수정·보충 및 효력 발생

1.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으며, 수정·보충되는 내용은 제5조 제2항과 같은 절차에 따라 효력을 발생한다.
2. 이 합의서는 쌍방 사무처장이 서명하고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3. 이 합의서는 일방이 상대측에 폐기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계속 효력을 가지며 폐기통지는 통지한 날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을 가진다.

2013년 10월 23일

개 성 공 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
남측 사무처장 이주태

개 성 공 업 지 구
북남공동위원회 사무처
북측 사무처장 윤승현

[붙임]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 출입증 양식

(앞면)

출 입 증
사 진 (35mm×45mm)
성 명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
직 위

(뒷면)

발행번호 : 성 별 : 생년월일 : 년 월 일 발행기관: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남측 사무처장 (인) 확인기관: 개성공업지구 북남공동위원회 북측 사무처장 (인)
--

- o 규격 : 가로 50mm × 세로 75mm
- o 색상 : 푸른색 (바탕), 검정색 (글자)

□ 남북 인도 분야 회담

남북적십자실무접촉 합의서

남과 북은 2013년 8월 23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적십자 실무 접촉을 갖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2013년 9월 25일부터 30일까지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금강산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 ① 상봉 규모는 쌍방이 각각 100명씩 하기로 한다.
 - ② 생사확인 의뢰서는 8월 29일에 남과 북이 200명에서 250명 사이 각기 편리한대로, 회보서는 9월 13일, 최종명단은 9월 16일에 교환한다.
 - ③ 상봉 형식과 방법 등은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 ④ 쌍방은 상봉시작 5일전에 선발대를 현지에 파견한다.
2. 남과 북은 2013년 10월 22일부터 10월 23일까지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진행하며, 상봉 규모는 쌍방이 각각 40가족씩 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11월 안에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한 차례 더 진행하는데 공감하면서 추석 계기 상봉이 끝난 직후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을 열고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생사확인, 서신교환 실시 등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하기로 하였다.

2013년 8월 23일

남 북 적 십 자 실 무 접 촉
남 측 수 석 대 표
이 덕 행

북 남 적 십 자 실 무 접 촉
북 측 단 장
박 용 일

남 북 대 화

제76호(2013.2.~2013.12.)

발행처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110-230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공원길 20 Tel. 02-2076-1043 Fax. 2076-1230
디자인 제작	(주)늘품플러스 Tel. 070-7090-1177
인쇄일	2014년 5월 27일
발행일	2014년 5월 29일
